

Left21.com

2009년 8월 15일 ~ 8월 28일 | 제12호 | 값 1,800원

리프트21

쌍용차 파업에 대한 보복과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77일간 영웅적인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파업에 연대한 동지들을 대량구속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농성을 풀고 나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던 경찰의 약속은 역시나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농성을 풀 후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 4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4명만 석방되고 나머지는 모두 구속됐다. 지금까지 조합원 3백3명과 연대 투쟁에 참여한 3백22명 등 총 6백25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64명(8월 11일 현재)이 구속된 상태다.

이번에 진정으로 끔찍한 폭력을 휘두른 자들은 구사대와 용역강패 그리고 경찰이었다. 사측은 법을 위반하면서 소화전까지 차단했고 노동자들을 굶겨 죽이려고 했다. 저들은 협동작전을 통해 위력적인 살상무기들로 노동자들을 공격했으며 대테러 진압 무기인 테이저건과 다연발 발사기를 사용했다. 옥상 위에서 쓰러진 조합원을 집단 폭행하는 경찰특공대의 모습에서는 살기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구사대와 용역강패, 경찰의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며 단

한 건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합원들의 “폭력” 뒤에 “외부 세력”의 ‘배후조종’이 있었다며 마녀사냥하고 있다. 쌍용차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외부세력이 별도로 만든 사무실”로 왜곡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20년 전의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을 언급하며 ‘이적단체’ 운운하고 있고, 또 지난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을 8월 11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쌍용차 파업 연대를

언급해 마녀사냥 확대를 예고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집행부를 상대로 5억 4천8백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후 더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듯 이명박은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고 쌍용차노조를 파괴하고 앞으로 투쟁을 봉쇄하기 위해 1997년 한총련 출범식 사건 후 12년 만에 최대의 공안사건을 만들고 있다. 이런 보복과 탄압을 통해 하반기 구조조정과 각종 개악을 위한 더 유리한 고

지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폭로로 국군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해 온 것도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 측도 맞받아쳐야 한다. 폭력 진압과 대량 구속에 항의하는 공동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진보진영은 쌍용차 투사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맞선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파업 타결 후 마무리 집회 쌍용차 파업은 온 국민의 뇌리에 ‘해고는 살인이다’를 각인시켰다.

사진 제공: 민중연대신문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 영웅적 파업이 보여 준 것

아쉽지만 선방한 투쟁의 교훈과 이후 과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이 8월 6일 아쉬운 절반의 성과로 마무리됐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와 투지를 불태우며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센 투쟁의 불길은 77일 만에 사그라들었다. 77일 만에 밖으로 나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선을 다했다는 당당함을 보이고 있다. 전지윤 기자(left21@left21.com)가 경제 위기 속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준 쌍용차 투쟁을 평가하며 교훈과 과제를 끌어낸다.

■ 왜 쌍용차는 노동유연화의 실험 대상이 됐는가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속에 쌍용차가 올해 초 법정관리 상태가 되면서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다.

반면 2004년에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정부와 쌍용차 인수 후 기술 유출만 한 ‘먹튀 자본’ 상하이차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위기의 주범인 정부와

사측은 되레 쌍용차 생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인 2천6백46명을 해고하려 했다. 이것은 세계경제 위기 속에 한국 자동차 산업을 구조조정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약 3천만 대가 과잉생산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GM, 크라이슬러 등이 무너지고 인수 합병이 벌어지면서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의 야망은 흑독한 구조

조정을 통해 GM 등이 몰락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5개인 자동차 업체를 3개 안팎으로 합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식경제부 내부 문건이 유출된 바 있고 도요타 등을 따라잡으려면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이런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 전반에 필요한 과제다. 지배자들은 이 과제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강성노조’라고 본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를 표적으로 삼았다. 쌍용차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노조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뿐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노사협조적 우파 지도부가 이끌어 온 상대적 약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쌍용차노조를 파괴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이며 민주노총의 오른팔·원팔이라는 현대·기아차 노조를 공격하는 디딤돌로 삼으려 한 것이다.

저들은 이런 계획과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사용했다.

첫째, 저들은 노동자를 위축시키려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청산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협박했다. 연관업체와 금융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관련업체까지 최대 20만여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청산은 경제적·정치적 후폭풍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지적처럼 이명박 정부는 막바지에 “쌍용자동차를 공중분해시키고 협력업체 직원 등 20만여 명의 일자리를 날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강성 노조를 길들이고 정리해고를 강제”

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

둘째, 저들은 끝없이 노동자들을 ‘산 자’와 ‘죽은 자’로 갈라치기 하며 이간질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희망퇴직 신청자와 비신청자를, 해고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이간질해 노동자들의 단결과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저들은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되면 노조가 [산 자와 죽은 자] 두 분파로 나뉠 것”(이유일)이라고 봤다. 그리고 2차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협박으로 ‘산 자’들을 강제 출근시켜 구사대 노릇을 강요했다. ‘산 자’에게 칼을 쥐어 주고 ‘죽은 자’의 등에 꽂으라고 강요했다. 8월 5일 살인 진압 과정에서 추락해 허리가 부러진 ‘죽은 자’ 형이 입원한 병원에 ‘정상조업’ 완장을 찬 ‘산 자’ 동생이 달려 온 모습을 저들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을 생생히 드러냈다.

▶ 3면으로 이어짐

종합

세상을 이끄는 힘

“제2차세계대전으로 알려진 대규모 공공사업 덕분에 종료된 1930년대 대공황[때 같은] ... 전략을 다시 쓰게 되지 않길 바란다”

폴 크루그먼의 섬뜩한 농담

조지 부시 : “당신은 강한 지도자”
이명박 : “재임시절 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
오랜만에 만난 두 ‘공공의 적’

농민 : “미생물과 흙을 섞은 겁니다”
이명박 : “여기에 미생물이 들어간 거야? ... 미생물 어디 있어? 안 보이네”
항상 반말하는 이명박의 호기심

“기관장의 공무 수행 차원에서 행사에 참석해 별 문제가 없다”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
미스코리아 심사가 공무 수행?

“오히려 조선일보는 현 정권에 ‘까칠한’ 대표적인 매체”
조중동에 방송을 넘겨준다는 비판에
청와대 관계자

“소망교회에서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광공사 사장 이창

“청산가리녀 김민선 ... 포카혼타스처럼 야성적이면서도 지적이고, 섹시함까지 감도는 데도 데뷔 10년이 되도록 확 뜨지 못했다”
광우병 정국 때 바른 말한 김민선을
끝까지 ‘갈구는’ <동아일보>

“원시 아만족도 아니고, 문민사회에서 이런 행태[언론악법 반대 투쟁]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낯으로 후손들을 대하겠나”
제 얼굴에 침뱉는 박희태

“우리 주변에 발암물질을 가진 음식이 얼마나 많으나 ... 불에 탄 음식, 된장, 고추장”, “최루액은 향수 뿌리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경기경찰청장 조현오,
발암 물질 섞인 최루액을 위한 변명

“중국집에서 스파게티 내놓는 것 같다”
이명박의 ‘서민’ 정책에 대한
뉴라이트의 반응

“쌍용을 잊지 마시다! 우리 모두가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다”
개그맨 김제동

경찰은 왜 그토록 폭력적인가

이번에 경찰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하는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삼단봉, 망치, 쇠도리깨,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등의 살상무기를 사용해 노동자를 공격했다.

이미 저항할 힘도 없는 노동자를 경찰특공대 여러 명이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짓밟는 장면은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섬뜩했다.

우리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배웠다. 또 경찰은 항상 ‘민생 치안’을 존재 이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민생 치안’은 경찰의 본질을 가리는 허울일 뿐이다. 경찰은 절도 사건의 절반도 해결하지 못한다. 더구나 살인·강간 같은 강력 범죄는 상당수가 가족,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예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데 혈안이 돼 있던 2008년 상반기 강도 사건 해결 비율은 1년 전보다 4퍼센트나 줄었다. 살인과 강간 같은 다른 강력 범죄 해결 비율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이는 경찰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자본주의는 소수인 지배자들이 다수인 평범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다.

소수인 지배자들은 지배를 유지하려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불평등, 억압, 착취 같은 자본주의의 특징은 노동자·민중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저항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배자들에게는 이를 무력화할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과 군대처럼 합법적으로 무기를 보유하고 살인을 자행하는 집단이 대표적인 강제력이다.



사진 출처 노동자세계

쌍용차 노동자를 집단 구타하는 경찰 이것이 경찰 ‘본연의 업무’다.

근대 경찰은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했다. 특히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저항에 대처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구실이다.

실제 근대 경찰의 첫째 임무 중 하나는 최초의 노동자 대중 운동이었던 차티스트 운동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해방 후 일제 경찰을 계승해 친일파가 득실거리던 한국의 경찰도 미군정과 이승만 독재에 저항

하던 사람들을 탄압하는 게 주 업무였다.

이처럼 경찰은 가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이 별 탈 없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게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실제로 경찰은 파업과 시위처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저항에 대해서는 폭력을 사용해 탄압한다. 쌍용차 노동자들한

테 행사한 잔혹한 폭력을 보라.

경찰은 사람을 죽이는 짓도 서슴지 않고 한다. 올해 초 경찰은 철거민 5명을 살해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하중근, 홍덕표 등 여러 노동자·농민들이 경찰 폭력으로 숨졌다. 그러나 어떤 경찰도 처벌받지 않았다.

‘선진국’이라 해서 경찰의 기능이 다른 것은 아니다. 올해 영국에서 열린 G20 반대 시위에서 이언 톰린슨이 경찰에 맞아 숨졌고,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의 G8 반대 시위에서도 카를로 줄리아니가 경찰 총격에 죽었다.

경찰은 자신들의 본질을 가리려고 짐짓 공정한 체 한다. 그래서 ‘공정한 법 집행’과 ‘정치적 중립’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파업을 하면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가차없이 진압하지만 삼성 이견희나 전두환 같은 파렴치한 비리 범죄자들을 두들겨 패서 체포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이 ‘공정한’ 경찰과 자본주의의 본 모습이다.

경찰은 쌍용차 진압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선보여 노동자들이 쉽사리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특공대를 포함해 경찰 4천여 명을 투입해 살인적인 진압을 했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의 용맹스러운 저항에 밀려 끝내 도장 2공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만약 강력한 연대 투쟁이 있었다면 살인 진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 운동이 그만큼 강력히 단결해서 투쟁할 때 전쟁과 빈곤, 불평등으로 얼룩진 자본주의와 함께 경찰 같은 국가 폭력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기고 |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고통과 비극을 낳은 현대판 노예제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8월 10일 YTN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 노동자로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했다. 경기도 한 채소 하우스에서 일한 태국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90만 원 월급을 받으며 휴일도 없이 일했고, 고용주의 성추

행에 시달리다 도망쳤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농·축산업에서 이렇게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체류 자격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1천 명에 이른다.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노조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을 받는 곳 대부분에는 임금체불, 직장 내 학대, 산업재해, 부당 대우를 견디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도입한 고용허가제 시행 5년 동안, 감금에 가까운 외출 통제, 15~16시간 혹사 노동 등의 문제들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 동포를 포함(방문취업제도)해 현재 약 50만 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다운 대우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애초 고용허가제 도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여 줄 것이라고 한 말은 거짓이었다.

고용허가제는 직장 이동 금지, 구직 기간 제한, 사업주에게 전적인 계약 갱신 권한 부여, 사업주의 직장 이탈 신고 권한 등을 명시해 사업주들의 전횡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제약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의 경쟁을 뚫고 한국행 티켓을 얻은 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는 매우 어

렵다. 과거에 악명 높던 ‘산업연수제도’와 마찬가지로 ‘현대판 노예제도’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허가제 옹호자인 설동훈 교수는 각국 정부들의 외국인력정책은 “국민국가의 이익 추구”이며 한국 정부 역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제약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주자 권리 제약이 내국인에게 이익인가?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국익’은 실상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

일례로 최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시행 5년 평가 토론회에서 노동부와 설 교수는 고용허가제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건설 현장에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것이 내국인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즉, 고용허가제의 직장 이동 규제를 풀면 제조업 등에서도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과 고용불안이 커질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건설 회사들의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판치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비호하고 용인해 건설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 온 것은 바로 정부였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일자리의 규

모는 경제적 상황에 달려 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에 나서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핑계로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걱정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쌍용차와 그 협력 업체 20만 명의 일자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정부와 자본가들을 떠올려 보라.

실사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커지고, 임금 하락 압력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이주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원인은 노동자들 내에 차별과 차별을 두고 분열시켜 모두의 조건을 공격하는 정부와 자본가들의 책략에 있다. 그것에 맞서는 올바른 방안은 정부의 위선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을 고무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급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는 물량 축소를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측에 맞서 파업을 벌여 해고를 철회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안이다. 이주노동자 권리 제약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는 신화에 매달리는 것은 진창으로 곤두박질치는 자름길이다.



쌍용차 파업 평가



77일간의 사투 노동자들은 하루 두끼 주먹밥을 먹고 에어컨 낙수를 끓여 마시며 초인적으로 저항해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썼다.

사진 이윤선

▶ 1면에서 이어짐

셋째, 이명박 정부와 사측은 무자비한 폭력과 물리력으로 쌍용차 평택공장을 전정터·생지옥으로 만들었다. 경찰 헬기는 노동자들의 살갗이 벗겨지게 하는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을 비처럼 쏟아 부었다. 경찰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테이저건과 나무방패를 뚫는 폭동진압용 다목적발사기까지 썼다.

8월 4~5일의 살인 진압에서 저들의 야만적 폭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노동자들이 점거한 도장공장이 30만 리터의 신나와 페인트가 가득한 그야말로 ‘화약고’라서 진압 과정의 실수로 폭발이 일어나면 인명 몰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저들은 살인 진압을 강행하려 했다. 그 와중에 노동자 2명이 추락하고 화재가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들은 모두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와 그 지배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적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 영웅적 점거 파업

쌍용차 점거 파업이 보여 준 것은 단지 지배자들의 야만과 폭력만이 아니다. 77일간의 파업은 이런 야만과 폭력에 맞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빛나는 의지로 눈부셨다.

제대로 물과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씻지도 못하며 경찰과 용역들이 휘두



사진 이윤선



사진 이윤선



사진 이윤선

- 경찰과 사측은 물·음식·가스를 차단했다. (위)
-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격을 막으려고 쌓아 올린 바리케이드 (가운데)
- “함께 살자” (아래)

제대로 물과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씻지도 못하며 경찰과 용역들이 휘두르는 온갖 살상무기에 다치고 최루액과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도 노동자들의 불타는 태양 같은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르는 온갖 살상무기에 다치고 최루액과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도 노동자들의 불타는 태양 같은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전쟁터·생지옥 속에서 막바지까지 4백50명이나 버틴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실로 영웅적인 투쟁이었다.

쌍용차 점거 파업은 화물연대의 박종태 열사 투쟁과 더불어 상반기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구실을 했다. 5월말에 <연합뉴스>는 “올해[하루는 산하조직이 앞장서고 총연맹이 뒤따르는 방식]”이라고 했다. 나아가 쌍용차노조는 서울 시청광장에 10만 명이 결집한 6월 10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자신들의 투쟁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 수호를 위한 투쟁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의 결합을 시도한 이 모범적 시도는 두 투쟁 모두를 고무했다. 경제 위

기 시기에 노동자 투쟁이 정치 투쟁과 결합할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쌍용차 파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굴뚝에 올라가고 파업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이기도 했다. “농성장 안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없다”, “함께 파업 하면서 나도 같은 노동자라는 존재감을 느낀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은 진정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 강경 투쟁 때문에 여론이 외면했는가?

보수 언론들은 쌍용차 투쟁이 “강경 투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민주노총이 무조건 강경 투쟁만 하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노동운동도 변신해야 한다”(〈서울신문〉 8월 8일치 인터뷰)며 이런 논리를 수용한다.

그러나 쌍용차 파업은 오히려 단호하고 강력한 점거 파업이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지지를 넓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파업이 지속될수록 고립되기는커녕 각계각층의 지지가 이어졌다.

6월 중순 여론 조사에서는 63퍼센트가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했고 79퍼센트가 경찰력 투입에 반대했다. 7월말 여론조사에서도 69퍼센트가 쌍용차 위기의 책임이 정부와 사측에 있다고 답했고 53퍼센트가 사측이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곳

곳에서 임금 삭감과 해고가 벌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쌍용차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다.

이런 여론의 압력 때문에 국가인권위도 긴급 구제 신청을 했고, 2004년에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장본인인 민주당조차 정부를 규탄했으며 가톨릭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경찰력 투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가족대책위 여성들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과 호소도 이 과정에서 큰 구실을 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은 단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으로 번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홍콩, 남아공, 브라질, 터키 등에서 지지 메시지와 집회 등이 이어졌다. 영국에서 공장 점거 파업중인 베스타스 노동자들은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브라질 급속노조는 현지의 쌍용차 판매점 봉쇄를 약속하기도 했다. 쌍용차 투쟁은 세계적 경제 위기와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BBC 방송은 “베스타스 노동자들은 한국 쌍용차 노동자들로부터 연대 메시지를 받고 분명 놀랐을 것이다. 두 공장 노동자들의 전술은 동일하다. … 두 곳에서 벌어진 저항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 흐름의 일부다. …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공장 점거 투쟁을 보게 될 듯하다”(8월 7일치)고 보도했다.

▶ 4면으로 이어짐

노동자들은 패배했는가?

보수 언론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백기투항”했다고 평가하며 ‘그토록 처절하고 강력하게 싸워도 결국 얻은 게 별로 없다’는 패배주의적 생각을 퍼뜨리려 한다. 안타깝게도 진보진영의 일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사 쪽이 승리한 거”라고 말한다.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자본의 승리로 끝났고 … 이명박 정권의 공격은 거침없이 계속될 거”라고 평가한다. 손호철 교수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러나 쌍용차 투쟁은 결코 저들의 일방적 승리나 노동자들의 일방적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처절

하고 강력한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의미있는 성과를 낳았다.

“백기투항을 원한다면 8백50개 관을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투지와 기세는 지배자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파업 침탈을 시도하던 경찰과 용역강패, 구사대들이 노동자들의 기세에 밀려 공무리를 빼며 도망치는 일이 거듭 벌어졌다. <조선일보> 경제부장 윤영신은 “이명박 정부는 평택을 ‘해방구’로 만든 쌍용차 노조의 불법에 무기력한 모습”이라며 “엠비노믹스는 이제 형체를 찾기 힘들어졌다”고 했다.

온갖 협박과 폭력으로도 노동자들의 사기와 투지를 꺾을 수 없었던 정부와 사측은 조금씩 물러서야 했다. 무엇보다 2천6백46명 중 희망퇴직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월 8일 정리해고

를 통보한 9백76명을 반드시 해고하려던 저들의 시도는 실패했다.

저들은 6월 26일 이중 1백50명을 무급휴직으로 구제해 고용을 유지한다는 ‘최종안’을 던졌다. 8월초에는 다시 3백90명을 무급휴직 등으로 구제한다는 소위 6:4 ‘최종안’을 던졌다. 다시 며칠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52:48로 4백70여 명을 구제한다는 ‘최종안’이 타결됐다(6백40명을 기준으로 한 48퍼센트와 8월초에 사측이 파업 이탈을 유도하면서 무급휴직을 약속해 준 노동자를 합친 숫자).

동지애와 결속력

정리해고가 실패하면 “9백70명 인원들이 무지무지한 압력단체가 되면서 … 모든 문제를 다 쥐고 흔들 것”이라던 법정부관리인 박영태의 걱정대로라

면, 여전히 5백여 명의 ‘무지무지한 압력단체’는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와 관련되는 회사 입장이 거의 다 관찰되었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평가는 사실과 맞지 않다.

희망퇴직금을 거의 두 배로 늘린 것,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비 지원을 지켜낸 것, 비정규직 고용 승계를 약속받은 것 등도 초인적인 투쟁이 낳은 성과일 것이다. 무엇보다 77일 동안 전쟁터·생지옥을 함께 견뎌 낸 투사들은 이미 어제의 그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들의 동지애와 결속력도 막강해졌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사측이] 구조조정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노조에 지나치게 양보”했고 “국내 최고 수준의 투쟁력을 입증한 ‘강성 노조’를 계속 끌고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쌍용차를 중심으로 한 노동

자들의 투쟁은 미디어법 날치기 후폭풍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운운하며 몇 가지 보잘것없는 조삼모사식 양보라도 내놓게 만든 동력이었다. 이명박이 차마 미디어법 날치기와 함께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지 못한 것도 이런 압력 때문이었다.

물론 최종 타결 내용은 77일간의 결사항전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결코 내키지 않을 내용이다.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도 “목숨을 걸고 투쟁했지만, 힘이 부족해 정리해고를 끝장내지 못했습니다. …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전쟁터·생지옥을 건너 온 동지들 중에 누가 남고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남아 있다. 이처럼 아쉬운 선행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의지와 투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쌍용차 파업 평가

▶ 3면에서 이어짐

■ 연대 투쟁의 부족이 낳은 아쉬운 결과

앞서 지적했듯 쌍용차가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래서 파업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쌍용차나 협력업체는 파업의 타격을 받았지만 자동차 산업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점거 파업에서 그렇지만 쌍용차에서는 특히나 더 연대가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이었다. 단호한 점거 파업과 강력한 연대 투쟁·파업을 결합시켜서 저들을 물러서게 해야 했다. 박노자 교수의 지적처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현대·기아자동차의 노동자들이 만약 라인 가동을 멈추었다면 지배자들은 ‘살인 진압’ 벌이기 전에 몇 번 더 생각해 봐야 했을 것”이다.

물론 수많은 학생들과 진보정당과 사회단체들은 매우 헌신적으로 연대했다. 이들은 용역·구사대의 폭행과 연행·구속까지 무릅쓰면서 쌍용차 투쟁 연대에 최선을 다했다.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 준 이들의 모습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외부세력만 없었어도 합의는 보다 빨리 이뤄졌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중앙일보>의 불평은 ‘연대 투쟁 때문에 대량해고와 살인 진압을 막아내 못했다’는 말일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주요 기업에서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조합들의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이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이런 투쟁을 지도하는 구실을 하지 않았다.

일부 연대 집회 등을 조직하고 연대 파업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들 지도자들은 **실질적인** 연대 투쟁과 파업을 **진지하게** 건설하기보다는 중재와 적절한 양보를 통한 타협을 추구했다.

그래서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도 “공장을 사수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중재자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이런 상황은 상층 간부들의 협상에 의존하는 산별노조보다는 기층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에 의존하는 산별노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물과 식량 전달이 가능할 만한 수만 명 규모의

연대 집회가 아닌 기껏 수 백, 수 천 명이 모인 연대 집회를 조직하고는 김빠지는 연설을 해서 참가자들을 힘 빠지게 했다. 협상이 벌어질 때는 협상만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협상 결렬 후 곧장 이어진 살인 진압에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쌍용차에서 대량 해고가 성공하면 현대·기아·GM대우 등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자동차 3사 노조 지도부도 ‘살인 해고’를 막는 데 진지하지 않았다. 현대차 윤해모 지도부는 무책임하게 사퇴해 쌍용차 투쟁 연대 등을 회피했고, 기아차 김종석 지도부는 기아차 파업과 쌍용차 파업을 연결시키는 데 소극적이었다. GM대우차 지도부는 임금 동결로 입단협을 조기 타결해 버렸다.

이들 지도자들은 ‘기층의 동력이 부족했고 호소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변명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쌍용차 파업은 명백히 여론의 큰 지지를 받았고 현장 노동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현대차 등 현장에서 의미 있는 수의 지지 서명과 모금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대차 대의원대회에서 쌍용차 연대파업 안전이 49퍼센트의 지지로 아깝게 부결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가능성을 현대·발전시키지 않은 지도자들에 있었다.

심지어 8월초 살인 진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자들은 하루 파업조차 선언하려 하지 않았다. 이 같이 연대 투쟁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감히 몇 번이나 살인 진압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름 전쯤 쌍용차 노조지도부와 안을 만들었는데 쌍용차 내부 농성자들이 이걸 안 받아들였다. 지금 안은 그때보다 후퇴한 것”(〈서울신문> 8월 8일치 인터뷰)이라고 평가한 것은 경악스럽다. 이것은 마치 노동자들이 굴복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한 것을 탓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런 투쟁이 없었다면 정리해고를 절반이나마 줄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연대 투쟁 건설은 뒷전에 미루고 타협이나 종용하던 태도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평택공장 앞에서 용역과 구사대에 굴욕적인 폭행을 당하며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지면 어찌나 하며 마음 졸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연대 투쟁 건설 바기는 환멸을 넘어 범죄적 배신으로 보였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에도 불구하고 대량 해고를 절반밖에 막지 못한 것의 책임과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 스티로폼도 녹이는 최후악을 노동자들 머리 위로 쏟아 붓는 경찰 (왼쪽)

● 가대위 여성들은 이번 투쟁의 또 다른 주역이었다. (오른쪽 위)

● 8월 4일 평택공장 앞에서 살인 진압에 항의하는 학생과 노동자들 (오른쪽 아래)

사진 이미진

사진 이미진

사진 이윤선



■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알미운 양보론 유감

조중동 등은 파업이 끝나고 나서도 ‘충분했던 물과 식량’, ‘호화판 농성’ 등 소설까지 써대며 노동자들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자유주의 개혁 언론들은 조중동처럼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지만 유감스럽고 알미운 양비론과 양보론을 펴며 노동자들의 사기와 투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겨레>는 쌍용차 노조에게 “일정 수준의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경향신문>도 “‘충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회’라는 당초 요구에 지나치게 얽매”었다

며 노조를 비판했다. 그러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사실상 죽음과도 같은 ‘살인해고’를 일부 수용하는 게 ‘유연한 태도’라는 말은 헛소리일 뿐이다.

나아가 <한겨레>는 “전부를 얻든가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서는 ‘끝장 투쟁’ 방식은 이번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즉, 적절한 양보 교섭을 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쌍용차노조는 5월 21일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이미 몇 차례나 임금 삭감 등의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보안에 대한 사측의 반응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 (5월 15일 사측 유인물)였다. 사측이 물

러선 것은 노조가 점거 파업을 사수하며 양보안까지 철회해 버렸을 때였다.

그 점에서 “현장 싸움에 매몰된 진보 진영의 투쟁 방식도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평가도 부적절하다. ‘현장 싸움’이야말로 정리해고를 일부라도 저지할 수 있게 한 진정한 동력이었다. 문제는 ‘현장 싸움’에 대한 연대 투쟁 건설을 방기한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물론 ‘현장 싸움’과 연대 투쟁의 결집점이 될 대안적 요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한겨레> 등이 말하는 ‘산업 발전 정책’이나 ‘고용안정협약’ 등이 아닌 공기업화였다.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은 왜 보수적으로 행동하는가

쌍용차 투쟁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자들의 연대 회피에 실망하고 분노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겁 많거나 타락한 몇몇 개인일 때문이 아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점하는 독특한 사회적 위치를 봐야 한다.

칼 마르크스는 노동조합은 그 한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무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조는 착취의 원인이 아니라 착취의 결과에만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자

체를 철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도 “러시아·쿠바 혁명처럼[할 게] … 아니라면 자본주의 구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것부터 정리해야 한다”(〈서울신문> 8월 8일치)고 말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내에서 특정 부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두고 사장과 투쟁 또는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게 된다. 이러한 입단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근자들은 독자적 계층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바로 노조 상층 간부들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떨어져 자본과 노동 사이를 중재하며 갈수록 보수화되곤 한다.

영국 노동당의 개혁주의자였던 시드니 웹과 베이트리스 웹 부부는 1894년에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이 전투성을 잃

어 가는지 관찰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보통의 열정적이고 무책임한 선동가에서 자신들의 탁월한 사업 능력으로 평범한 노동조합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선택된 영구적 유급 간부층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다.” “파업에 수반되는 힘들고 답답지 않은 일에 대한 싫증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그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별로 공감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조합원들의 상당 부분이 거부하는 협상에 타협하고 만다.”

보수화 압력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의 관심은 기업주들과 타협하는 일이다. 투쟁에서 패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적 대결의 위험은 피하면서 중재를 계속하는 것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부는 자본이든 협상이 중요하다. … 교

섭 책임이 민노총에 있었다고 한다면 [쌍용차 투쟁 결과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며 협상 중시 태도를 드러냈다.

물론 위기에 몰릴 경우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조합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체제가 위기에 처하는 경제 위기 시기에 이들의 투쟁 회피와 보수성은 더 심해진다.

사람들은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의 나약함을 보면서 상층부의 사람들을 바꾸면 해결된다고 믿곤 한다. 물론 노조 지도부 좌와 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게다가 좌파 지도부 선출은 조합원들의 싸우려는 의지를 북돋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좌파 지도부라도 여전히 모든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처럼 보수적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번 투쟁을 회피하고 사퇴한 현대차 윤해모 지도

부는 대표적인 좌파 지도부였다. 아래로부터 투쟁보다 좌파 지도부 건설에 더 치중해 온 현대차의 수많은 ‘현장조직’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기력하기만 했다.

따라서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에게 가해지는 보수적 압력에 맞서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독립적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압력을 넣고 현장 노동자들의 지지와 행동을 조직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 네트워크는 더 좌파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이것이 아래로부터 투쟁 건설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말이다.

이 네트워크는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이 노동자들을 올바르게 대표할 때는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독립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번 쌍용차 투쟁 때 바로 이런 행동이 절실히 필요했다.

쌍용차 파업 평가



6월 10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 쌍용차 노동자들

사진 임수현

■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 보장 요구가 필요했다

쌍용차 파업이 타결된 8월 6일 MBC ‘100분 토론’에서 전경련 상무 배상근은 역겹게도 “썩은 살을 도려내”듯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를 망친 ‘썩은 살’은 상하이차와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인데 애꿎은 노동자들을 ‘살인 해고’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파산한 기업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 과잉생산 때문에 쌍용차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자동차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단국

대 김태기 교수는 “선장은 전체 선원을 살리기 위해 소수의 선원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100분 토론’)고 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쌍용차노조도 파업 돌입 전에 거둬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를 담은 양보안을 제시했다. ‘진보도 경쟁력 강화의 산업 정책과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혁주의자들과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은 이런 함정에 빠져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자를 희생시켜 회사와 경제를 살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세계적 과잉생산은 한국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문닫아도 해결될 수 없다. 세계 시장은 3천만 대가 과잉인데 한국의 내수와 수

출 자동차를 모두 합쳐도 6백만 대가 안 된다. 이윤을 위한 세계적 경쟁 자체가 끊임없이 과잉생산을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GM, 도요타, 쌍용차, 현대차 등의 노동자들이 끝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노동자 임금 삭감과 해고는 과잉생산 문제를 악화시킨다. 당장 쌍용차 노동자들은 자동차 할부금도 못 갚고 신차 구입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위기 속에 해고와 이윤 회복, 경쟁 격화와 위기의 재등장, 되풀이되는 해고는 끝없는 악순환일 뿐이다.

쌍용차노조가 주장했듯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하려면 정부가 부자 감세나 4대강 정비 등에 쓸 돈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쌍용차노조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 요구는 ‘쌍용차를 망친 자들은 어디 가고 왜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고 이후 재매각이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쌍용차를 재매각하면 상하이차 매각 과정의 재앙이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사기업이 이런 잉여인력과 강성 노조를 인수하겠느냐’는 저들에 맞서 국가가 책임지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연관업체 20만여 명의 고용도 안정시키라는 공기업화 요구가 필요했다.

공기업화를 통해 과잉생산된 자동차가 아니라 친환경적 대중교통 등을 만드는 데 인력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때 GM의 자동차 공장을 폐쇄하고 무기·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꿔 가동시켰다. 이런 식의 전환이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

또 ‘과잉인력’은 급속노조가 요구해 온 노동시간 단축과 주간연속2교대제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도록 밤새 일하고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 모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처 버린 이윤 경쟁의 포로인 지배자들은 이같은 합리적인 대안을 한사코 거부한다. 따라서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 보장 요구는 점거 파업과 연대 파업 같은 강력한 대중 투쟁의 뒷받침을 받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 이런 투쟁은 배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선장을 교체하고 선원들이 배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근본 변혁을 위한 투쟁과 연결될 수 있다.

전망과 과제

쌍용차의 투사들은 영웅적인 투쟁으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가 전쟁터로 변하는 상황을 겪어야 한다면 누가 …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하고 우려했다. 더구나 이번 쌍용차 파업에 대한 야만적인 고사 작전과 살인 진압 시도는 이명박과 노동자·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피와 눈물의 강물을 더 깊게 하며 반이명박 정서와 증오심을 더 심화시켰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악랄한 보복과 뒤통수 치기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도 “쌍용차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철저한 보복을 주문했다. 따라서 쌍용차의 투사들은 즉각 자신들의 결속력을 이용해 비대위 등을 구성하고 노조 무력화 보복과 9월 노동조합 선거에서 우파 지도부 건설 시도, 재매각과 구조조정 시도 등에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쌍용차 투쟁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번 투쟁의 교훈을 곱씹으며 다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명박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의 고킨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언제든 [쌍용차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쌍용차 투쟁이 끝난 바로 다음날 부산항과 울산항의 예인선 노동자들은 ‘수출입 마비의 물류 대란’을 가져 올 수 있는 파업에 돌입하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줬다.

다음의 ‘유사한 사례’ 때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보여 준 단호한 점거 파업에 반드시 강력한 연대 투쟁과 파업을 결합시켜야 한다. 물론 현재 민주노총과 급속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이 투쟁 회피적 지도부를 뛰어넘는 높은 자신감과 투지, 정치 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위기에 다소 위축돼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부문의 벽을 넘는 연대나 정치 투쟁으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고 연대를 추동할 현장 활동가들의 규모와 결속력도 그다지 높지 않다. 지난해 촛불항쟁이라는 절호의 기회에 파업

에 나서지 못했던 정치적 한계가 이번에는 쌍용차 연대 투쟁의 부족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활동가들과 현장의 투사들은 노동자들과 피억압 대중의 자신감과 정치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을 하며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경제 위기 속에 체제에 맞서기보다 양보에 기울고 연대보다는 부문주의를 부추기는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를 투쟁에 나서도록 압박하거나 그들이 투쟁을 회피할 때는 독립적인 투쟁을 건설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와 투사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이번에 현대차에서 쌍용차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하며 5천여명 조합원의 지지 서명을 받은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은 그런 네트워크 건설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투사들의 네트워크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은 이런 네트워크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고무할 수 있고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정치와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은 현장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을 정치 투쟁과 연결해 상호 결합·발전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지난한 과정일 수 있고 많은 인내심과 참용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지난해 촛불항쟁 이후 노동자·피억압 대중의 자신감과 정치의식이 조금씩 고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재보선 때 울산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의 당선과 김상곤 후보의 경기도교육감 당선은 그것을 반영하는 지표였다. 특히 한나라당에 빼앗겼던 울산에서 진보정당의 의석 재탈환은 상징적이었다.

이것은 경제 투쟁 자체의 진전만이 아니라 촛불항쟁같은 정치 투쟁의 충격으로도 노동자들의 의식과 자신감이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에 모두 개입해야 하고 두 투쟁을 연결하며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많은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이 이번에 쌍용차의 투사들이 보여 준 것 같은 투지와 용기를 가지고 함께 연대해서 싸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와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쌍용차비정규직지회 서맹섭 부지회장과 함께 86일간 굴뚝 농성을 벌인 쌍용차정비지회 **김동민 부지회장**에게 이번 파업에 대한 평가와 소감을 들어 보았다.

이번 파업에 대한 소감과 평가를 들려주시시오.

우리 동지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 훌륭했습니다. 누구든 쌍용차는 한 달도 채 못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저부터 그런 우려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질서를 갖추고 서로를 믿고 대오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공장을 노동자들의 해방구로 만들었지요. 조합원들도 연대 대오들을 보면서, 연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굴뚝에서 비정규직지회 서맹섭 동지와 얘기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이후에도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승리다”, “패배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후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이 어떻게 나설 것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 땅에서 정리해고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면 그것은 충분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후에 계속 다른 사업장들에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투쟁이 무력화되고, 이 상황을 진보진영이 방관한다면, 그건 패배일 것입니다.

다만, 쌍용차 투쟁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리해고는 살인이구나 하는 정서를 갖게 된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함께 살자’, ‘해고는 살인이다’ 하는 구호를 놓지 않았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취하 하겠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는데도, 정부와 사측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소위 강성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

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막아내는 것도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노조가 애초 양보안을 내지 않아서 희생이 커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양보할 수는 없죠.

이번에 급속노조나 민주노총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유연성의 본보기로 우리를 공격했고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노총이든 급속노조든 나섰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하고 반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합원들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우선 신체적인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안도가 있고요, [함께 투쟁한 사람 중에] 반이 갈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집안 사정도 어렵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아픔이 있는 것은 다 공통적이구요.

하지만 투쟁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육체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투쟁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투쟁을 ‘제대로 보는 법’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부쩍 커졌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은 이명박의 ‘친서민’ 사기극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을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주장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은 대중의 반감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모아 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시사IN> 99호는 기획 특집 ‘이명박 시대를 제대로 보는 법’에서, 이 같은 진보진영의 담론이 “분노하는 소수”를 “‘홍분’시키는 비판”일 뿐, “방향이나 설득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IN> 고동우 기자는 이명박 퇴진론을 뒷받침하는 ‘독재·파쇼론’이 “‘진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한다. ‘진짜 현실’에서는 ‘선출된 권력’ 뒤에 진정한 힘을 가진 ‘재벌과 조종동’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고, 따라서 이명박만 사라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 또한 이런 비판에 동참한다. “모든 걸 이명박에서 출발하는 논리는 일종의 ‘메시아주의’”이며, “여러 권력의 복합체이자 갈등의 구현체인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이명박’이라는 ‘얼굴마담’의 흠결로 환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를 “반민주 세력 또는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덕적 비판”일 뿐 정확한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을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장이다. 이명박 정권이 집회 불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언론 자유 제약 등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적 기본권이 1980년대 군사독재 수준으로 제약받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한국 사회 민주화의 동력이었던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의 운동과 조직들(노동조합, 노동자 정당 등)이 파괴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을 노동자들의 조직을 절멸시키려는 파시즘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를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이택광 교수의 주장은 황당하다. 한국 사회가 독재로 회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을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의 불완전한 민주화조차 학생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이고, 그 과정에서 보수 우파와 한나라당은 민주화를 계속 가로막고 후퇴시키려 한 세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

고동우 기자의 지적대로 ‘독재·파쇼론’은 “이명박 정부를 ‘실재보다’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게 보이도록 하는 약점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는 것은 강력해서가 아니라, “‘겉보기와 달리’ 매우 허약”하기 때문이다. 고동우 기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의 현재 역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독재·파쇼론’의 약점이다.

그럼에도 고동우 기자의 실천적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고동우 기자는 이명박 정권이 취약하고 진정한 권력은 다른 데 있으므로 사실상 정권 반대 운동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려는 듯하다.

물론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대기업 총



지난해 촛불항쟁 참가자들 이들은 ‘선출된 권력’보다 대중 자신의 주권을 우위에 놓고 싶어 했다.

사진 이미지

수, 군대·경찰·사법기구 수뇌부 등에 진정한 권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명박 퇴진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반정부 투쟁 외에도 경제 위기, 제국주의 전쟁과 경쟁, 차별과 억압, 소외, 착취와 불평등에 맞서며 이를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과 연결시켜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배계급 이익에 충실한 ‘선출된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의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선출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강력한 영향을 받지만 단지 그들의 꼭두각시인 것만은 아니다. ‘선출된 권력’은 지배계급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 따라서 ‘선출된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은 지배계급 전체에 맞선 투쟁의 일부다.

또한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투쟁은 후자에게도 곤혹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정권 반대 투쟁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맞선 투쟁은 대립되기는커녕 상호보완적이다. 무엇보다 반정부 투쟁이 성공을 거둔다면 경제 권력에 맞서는 운동을 고무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진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대중은 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 선출된 집단이 대중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그들을 통제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19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그런 사례다.

사실 고동우 기자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문제를 언급했지만,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고동우 기자가 정권 퇴진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선출된 권력’을 선거가 아니라 투쟁을 통해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한정하는 지식인들의 주장을 우호적으로 인용한다.

가령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정권에 대한 “괴물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권력과 대중의 괴리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꼭 필요한 시기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호흡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실상 선거 시기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자제하라고 주문한다.

김윤철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도 비슷하게 주장한다. “아무리 밍더라도 여췄든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 내에 존재한다. 모든 문제가 선출된 권력에 있다는 식으로만 비판하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회의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실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회의는 매우 깊다. 서구나 한국이나 투표를 저하는 공통된 추세다. 그러나 이런 ‘대중의 회의’는 정권 비판 세력이 아니라 기업주와 부자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의사를 무시한 ‘선출된 권력’ 스스로가 부추긴 것이다. 게다가 이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제도가 대중의 민주주의 열망을 채워 주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진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대중은 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 선출된 집단이 대중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그들을 통제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집권 초부터 수백만 대중의 저항에 부딪혔고, 지금껏 국민 다수의 환멸을 사는

정권이 단지 선출됐다는 이유로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촛불항쟁 때 수많은 대중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며 ‘선출된 권력’보다 대중 자신의 주권을 우위에 놓고 싶어 했던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한 반발이었다.

정권 퇴진론의 현실성

한편 고동우 기자는 진보신당 관계자인 터뷰를 인용해, 정권 퇴진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독재·파쇼론’을 비판할 때는 이명박 정권이 취약하다면서, 모순이게도 취약한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엄청난 국가 탄압으로 대중 행동이 억압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중의 사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현 국면에서 당장 퇴진의 동력이 준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 같은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촛불항쟁을 통해, 대중 자신의 힘으로 정권 퇴진의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서울 도심에서만 70만 명이 시위에 나선 6월 10일 전후로 정권의 지지율이 7퍼센트로 떨어지고, 퇴진 지지 여론이 40퍼센트에 이르렀을 때는 분명히 퇴진을 실질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정권 퇴진을 운동의 목표로 삼기를 극구 거부하고, 촛불항쟁을 노동자 파업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회피해 기회를 놓치게 됐다.

그럼에도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이 개혁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점만큼은 대중적으로 분명히 입증됐다. 용산 살인 진압과 쌍용차 진압 등을 거치며 이런 점은 더 분명해졌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총체적 불신의 대상이 됐고, 충성도가 높지 않은 집토끼들이라도 달래 지지를 30퍼센트를 턱걸이하는 식으로 연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진을 운동의 목표로 삼고 조직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고 현실성 있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 건설을 결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물론 이명박 퇴진 이후에 박근혜 같은 정치인이 집권할 것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결정된 문제가 아니다. 퇴진을 어떤 힘으로 이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민약 대중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퇴진시킨다면, 자신감을 얻은 대중은 진보적 대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물론 대안 부재 상황을 비집고 우파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들이 우파적 프로그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명박 퇴진은 현실화할 수 있는 목표다. 다만 이를 위해 기존의 민주주의 투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이 경험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은 오늘날 민주주의 투쟁을 이끌 수 있는 세력은 노동자 계급이라는 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에는 한참 못미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조차 자본가들이 선사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투쟁에 대한 지배자들의 양보로서 나타났다. 보통 선거권은 서구에서 1백 년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고, 한국의 제한된 민주화 과정조차 19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그에 이은 민주노조와 진보정당 건설 운동 등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퇴진을 현실화하려면 노동계급이 경제 위기 고통전기에 맞선 투쟁과 함께 민주주의 투쟁에서도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혁적 좌파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물질적·이데올로기적 지원을 통해 노동계급의 자신감을 고무하고, 민주주의 투쟁이 노동계급적 요구와 결합되도록 애써야 한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20대 보수화 논쟁

20대는 분노할 줄 모르고 정치에 무관심한가

20대가 보수화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명제가 됐다. 급기야 20대가 이명박을 찍어서, 20대가 제 살길만 찾고 침묵해서 살기 힘들다는 20대 원죄론까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다. 최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획 연재 “우향우 20대?”의 필자들 중 일부는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분노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최근 <조선일보>도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의 조사를 근거로 ‘서울대생 보수화 경향 뚜렷’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40퍼센트를 넘는다. 또 한나라당이 지지율 1위이긴 했지만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한나라당의 지지율(20퍼센트)보다 9퍼센트가 더 많았다.

최근 CBS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20대는 40퍼센트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의 감절이었 다.

공식 정치에 대한 무관심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보수화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20대가 무관심한 것은 정치 자체라기보다는 공식 정치다.

2007년 대선 때 20대의 42퍼센트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에 참여한 20대 중 42.5퍼센트가 이명박에 투표한 것이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돼 왔다.

그러나 한윤형 씨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동네북’ 돼버린 20대를 위한 변명”에서 지적했듯 “2007년 대선에서 20대들의 표심의 진정한 경향성은 ‘한나라당 지지’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몰락’이었다.”

2002년 대선 당시 ‘진보’로 여겨졌던 노무현 정권에 대한 20대의 지지가 정권 5년 동안 환멸과 냉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대다수 20대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대학생들은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시달렸고 청년 노동자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참여한 일부 20대들은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고 청계천을 복원시킨 ‘불도저’ 이명박이 경제라도 살릴지 모른다고 냉소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20대는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괴로운 선택을 거부했다. 그래서 20대 투표율은 역대 최저였다.

공식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이 어찌나 컸던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가 2008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정치인을 신뢰한다는 대학생은 1.6퍼센트였다.

그런데도 <중앙일보>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20대의 저조한 투표 행태는 ... 사회 적응 과정의 미성숙 상태를 말해준다”며 “투표를 통해 민주 역량 길러라”고 충고한 것은 정말이지 위선적이다. 따라서 20대가 이명박을 당선시킨 주범이라는 식의 책임 전가는 말도 안 된다.

촛불 항쟁 이후의 20대

물론 20대를 단일한 정치적 의식을 가진 집단이나 계급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20대라 할지라도 처지와 경험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20대 중에서 이제껏 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기대돼 온 학생들로 좁혀서 본다면 이들은 분명 반MB운동에서 일정 구실을 해 왔다.



5월 30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반MB 운동의 주역 중 하나였다.

사진 임수현

이명박 집권 직후인 지난해 3월 28일, 대학생 1만 명이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로 집결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대학생 단일 집회로는 최대 규모였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나몰라라 하던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경찰의 체포 전담반 투입 협박에도 참가 학생들은 “천만 원 등록금은 이명박 네가 내라” 하는 구호를 외치며 자신감 있게 거리 행진을 했다. 이 집회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대중 행동을 고무했다.

이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이 계기가 되면서 공기업 민영화, 언론 장악, 대운하 등 이명박의 핵심 정책에 반대하며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흔히들 10대가 집회의 주역이었고 20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노동자 등 20~30대도 촛불의 주역중 하나였다. 다만 학생회 등의

깃발 아래 조직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을 뿐이다. 20대의 상당수는 개인주의적, 반권위주의적 특성 때문에 학생회 등의 깃발이 아니라 쏘울 드레서, 쌍곡, MLB PARK 같은 느슨한 인터넷 동호회나 친구들과 삼삼오오 집회에 참가했다.

촛불항쟁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낸 20대의 상당수는 촛불항쟁 경험을 통해 공기업 · 의료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 지지 등 노동자 운동과의 접점을 만들기도 했다.

2008년 촛불 항쟁은 20대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그러나 4 · 19, 1987년 6월 항쟁 등 한국 사회의 변곡점에서 학생 운동이 주요한 구실을 해왔던 것에 비춰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특히 촛불이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촛불항쟁에 참가했던 20대의 상당수가 일시적인 사기저하를 겪었던 듯하다. 게다가 이명박은 촛불을 끄기 위해 광폭한 탄압을 시작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연행되거나 소환장을 받아야 했다. 행동하는 20대에 가해지는 탄압의 공포는 이들의 행동을 움츠리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이 휘청거리는 속에 곤두박질하는 한국 경제는 20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다 보니 체제나 정권에 대한 반감에 비해 행동은 그에 못 미치는 간극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화하는 학생들의 의식은 대체로 급진 개혁주의 정도에 와 있는 듯하다.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 20대는 차기 대선주자로 반기문과 유시민을 꼽았다. 진중권 · 박노자 · 우석훈 같은 자유주의적이며 개혁주의적인 급진 지식인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20대는 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성장했고 사회주의를 자처했던 일당 독

재 체제(북한, 중국, 소련 등)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래서 오늘날 20대는 대체로 개인주의와 자율주의, 반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최근 대학 교육에서 경쟁이 강화된 것도 이런 성향을 더욱 부추겼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 역시 이직률도 높고 고용 자체가 불안정해 집단적 투쟁 경험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열의가 높은 급진적 20대라 할지라도 단체나 조직으로 단결해 싸우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학생의 시민 ·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20퍼센트 정도에 머물고 있다. 촛불항쟁에 참가한 20대의 다수가 일체의 ‘지도’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좌파의 과제

이런 상황에서 좌파는 20대를 ‘왜 행동하지 않느냐’고 무조건 다그치거나 반대로 체념하기보다는 20대와 대화하고 이들을 설득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윤형 씨는 “발상을 전환해 20대에 게 다가가야” 한다며 “말을 잃은 20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 그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주장처럼 좌파는 20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된 이유[는] ... 한나라당은 집값 올려주고 세금 깎아주겠다는 걸 알겠는데 소위 진보 · 개혁 세력들은 나에게 뭘 해주겠다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며 “이명박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민주화’를 소리높여 외치는 거대담론을 벗어나 구체적인 언어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가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 인턴제, 대졸 초임 삭감 등으로 경제 위기의 고통을 20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따

라서 좌파는 20대에게 이 끔찍한 현실을 바꾸는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대가 지지하는 급진적 지식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면서 이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급진적 대안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들의 자율주의와 반권위주의적 성향을 이해하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다가 가야 한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기층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운동을 건설하려 노력한 결과 촛불 이후 많은 대학의 학생회 선거에서 전진했고, 자본주의연구회도 많은 진보 지식인들의 초청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청중을 늘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것은 20대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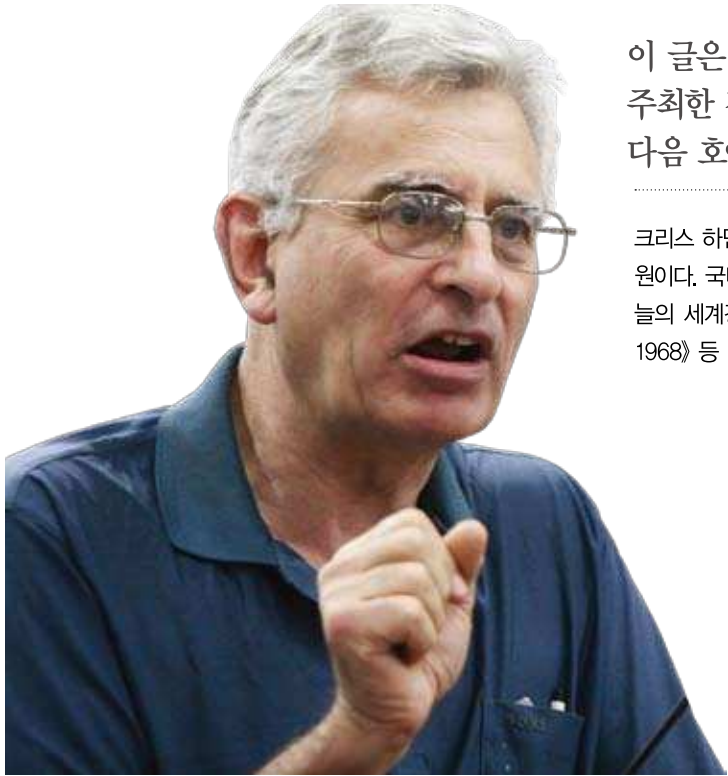
나아가 좌파는 민주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조직과 운동이 20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고 경험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좌파는 20대가 가진 정치적 관심과 분노를 한데 모으려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미디어법 날치기와 공안 탄압, 쌍용차 폭력 진압 등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성과 야만성에 분노했다. 아마 이들 중 가장 적극적인 일부는 직접 행동에 나서고자 할 것이다. 사상은 다르더라도 이런 20대와 함께 행동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대중적 투쟁이 분출하기 오래 전부터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좌파가 20대의 현재 상태와 의식을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진지한 소수를 이런 네트워크 구축에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지윤 기자 | dejune@left21.com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7월 24일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포럼 ‘맑시즘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다음 호에는 ‘오늘의 제국주의’가 실릴 예정이다.

크리스 하먼은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에는 최근에 나온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공저)를 비롯해 《민중의 세계사》,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 《오늘날의 노동자계급》,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세계를 뒤흔든 1968》 등 10여 권의 책이 번역·출판됐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입니다. 한국에서도 10여 년 전에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때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하고 가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어떤 것인지 실감했을 것입니다.

► 위기의 원인

이 같은 공격에 맞서 싸우려면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다들 알다시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지난 5~10년 동안 세계 곳곳의 은행들은 미국의 가장 가난한 계층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종전보다 큰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대출 회사들은 살 집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2~3년 동안은 대출을 유도하려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익을 내려고 금리를 왕창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경제 위기일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본가들이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동원한 사상들이 더는 현실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30년 동안 그들은, 누구도 국가에 경제적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레노블 이제 와서는 은행들을 보호하려고 수조 달러를 퍼주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정치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위기에 대처할 명확한 방안이 없습니다. 대처 방식을 두고 지배계급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더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배자들은 위기가 끝나 간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TV로 CNN을 시청할 수 있는데, CNN에서 요즘 방영하는 경제 프로 제목이 《경기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피로에서는 남한의 경제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수준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에 어떻게 탈출할지, 탈출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들은 은행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에 충분한 돈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많은 돈을 결국은 어딘가에서 회수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평범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점이 한국에서 시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미국에서는 교육·복지·보건 예산으로 들어갈 돈이 은행

들의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임을 뜻합니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저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업과 해고의 고통을 안겨 줄 뿐 아니라 향후 5~10년 동안 복지 지출을 삭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 위기의 원인

이 같은 공격에 맞서 싸우려면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다들 알다시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지난 5~10년 동안 세계 곳곳의 은행들은 미국의 가장 가난한 계층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종전보다 큰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대출 회사들은 살 집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2~3년 동안은 대출을 유도하려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익을 내려고 금리를 왕창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경제 위기일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본가들이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동원한 사상들이 더는 현실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30년 동안 그들은, 누구도 국가에 경제적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레노블 이제 와서는 은행들을 보호하려고 수조 달러를 퍼주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정치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위기에 대처할 명확한 방안이 없습니다. 대처 방식을 두고 지배계급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더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배자들은 위기가 끝나 간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TV로 CNN을 시청할 수 있는데, CNN에서 요즘 방영하는 경제 프로 제목이 《경기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피로에서는 남한의 경제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수준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에 어떻게 탈출할지, 탈출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들은 은행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에 충분한 돈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많은 돈을 결국은 어딘가에서 회수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평범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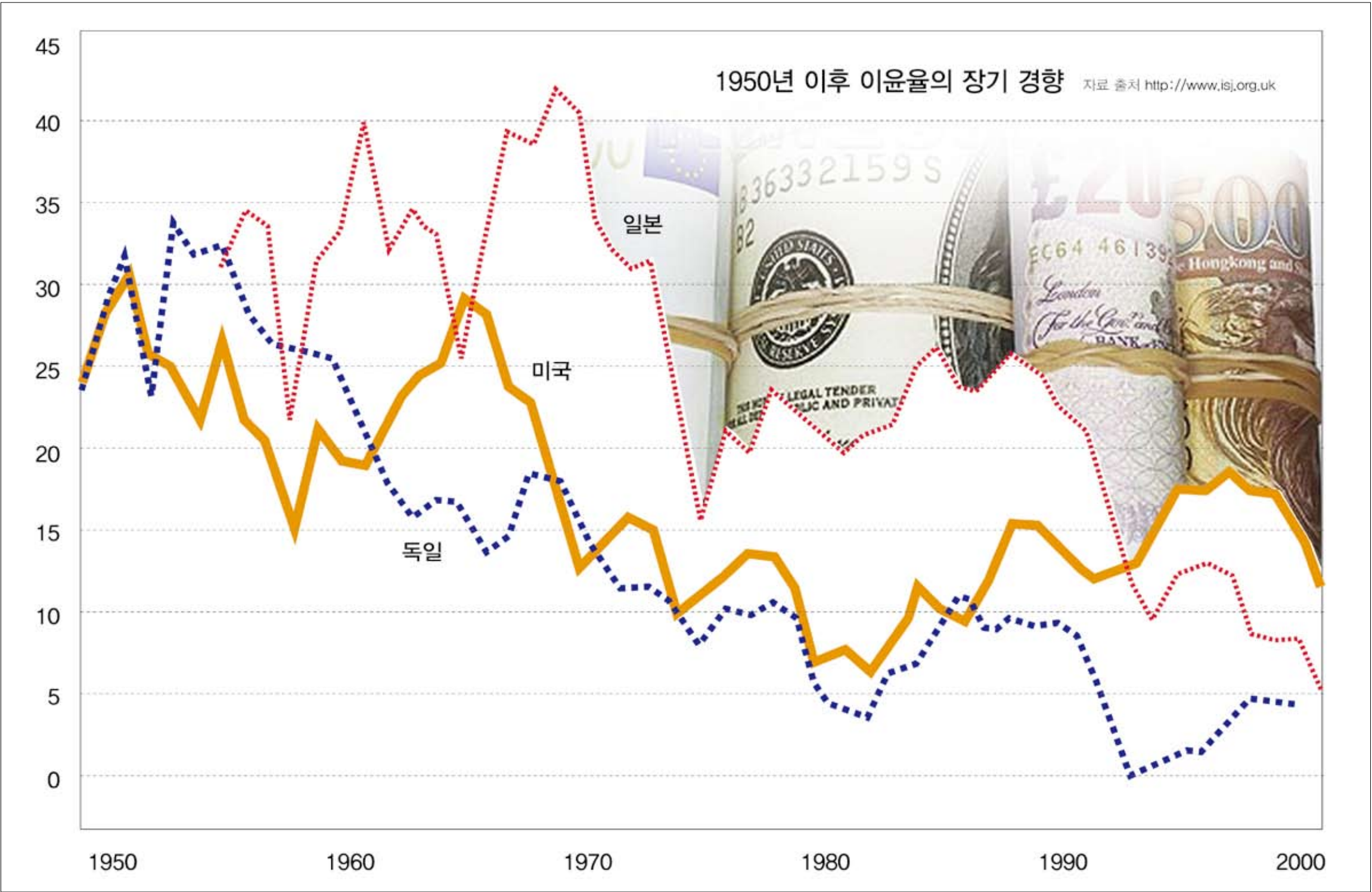
저는 한국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점이 한국에서 시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미국에서는 교육·복지·보건 예산으로 들어갈 돈이 은행

들의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임을 뜻합니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저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업과 해고의 고통을 안겨 줄 뿐 아니라 향후 5~10년 동안 복지 지출을 삭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정치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위기에 대처할 명확한 방안이 없습니다. 대처 방식을 두고 지배계급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더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배자들은 위기가 끝나 간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TV로 CNN을 시청할 수 있는데, CNN에서 요즘 방영하는 경제 프로 제목이 《경기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피로에서는 남한의 경제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수준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에 어떻게 탈출할지, 탈출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들은 은행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에 충분한 돈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많은 돈을 결국은 어딘가에서 회수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평범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정치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위기에 대처할 명확한 방안이 없습니다. 대처 방식을 두고 지배계급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더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배자들은 위기가 끝나 간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TV로 CNN을 시청할 수 있는데, CNN에서 요즘 방영하는 경제 프로 제목이 《경기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피로에서는 남한의 경제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수준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에 어떻게 탈출할지, 탈출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들은 은행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에 충분한 돈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많은 돈을 결국은 어딘가에서 회수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평범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정치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위기에 대처할 명확한 방안이 없습니다. 대처 방식을 두고 지배계급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더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배자들은 위기가 끝나 간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TV로 CNN을 시청할 수 있는데, CNN에서 요즘 방영하는 경제 프로 제목이 《경기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피로에서는 남한의 경제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수준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에 어떻게 탈출할지, 탈출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들은 은행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에 충분한 돈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많은 돈을 결국은 어딘가에서 회수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평범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이윤율 그래프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호황이 불황으로 전환됩니다.

► 마르크스의 위기 설명

마르크스는 1867년에 쓴 《자본론》에서 이 과정을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마르크스가 1백50년 전에 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 마치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인 듯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호황이 찾아오고, 호황은 불황으로 연결되며, 불황이 오면 어느 순간부터 임금이 하락하고 자본가들도 원재료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재

개하고 다시 호황이 찾아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호황-불황 사이클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황이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먼거리로, 심지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자신의 생활이 안정됐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불황이 찾아오면, 그들의 삶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다른 측면도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경제의] 상승-하강 과정을 발생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르는 정도 올라갑니다. 결국 일부 자본가들은 생산을 해도 이윤이 별로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재산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합니다. 이 덕분에 다른 자본가들도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길을 잃게 됩니

다. 이것은 자본주의 작동 방식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이번 경제 위기를 은행가들의 실수가 빚은 우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좀더 강했다라면 위기도 없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이번 위기가 발생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820년 이래 거의 10년마다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위기의 원인은 이전 위기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성격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하는 자본가들이 자신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재화를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모든 자본가들이 원재료를 사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돈을 빌리고 생산을 늘리느라 야단법석을 떨니다.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는 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활동의 규모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리려는 자본가들의 경쟁은 이자율을 높이고, 원재료를 둘러싼 경쟁은 원재료 가격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려는 경쟁으로 임금도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결국 일부 자본가들은 생산을 해도 이윤이 별로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재산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합니다. 이 덕분에 다른 자본가들도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길을 잃게 됩니

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나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한참 머리를 굴렸으며, 끝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이윤율 하락 경향'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투자한 자본에 비해 충분한 이윤을 얻기 힘들어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본주의에는 단기적인 경기 상승과 하락 외에, 시간이 갈수록 위기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을 낳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래 국제적인 이윤율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4~1975년, 1980년, 1990년, 1997년, 2000년과 지금 까지 위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가 발달할수록 투자한 자본에 비해 충분한 이윤을 얻기 힘들어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본주의에는 단기적인 경기 상승과 하락 외에, 시간이 갈수록 위기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경향이 사실이라면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더 많은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토록 빨리 성장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단기적 위기로 일부 자본가들이 망하고, 다른 자본가가 망한 자본가의 기계와 원료를 값싸게 사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자본가들이 다른 자본가들을 먹어 치워 장기적 이윤율 하락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부 흡혈귀들이 다른 흡혈귀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너럴모터스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월굴에 한국 자동차 회사들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누가 위기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따라서 만약 한 가지 수단이 없었더라면 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생산에 투자하기보다 대중에게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여기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품이 발생했고, 자본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이에 의존해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에도 묘사했던 지난 5년간의 주택 거품은 그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을 낳았습니다.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이윤을 회복하려고 노동자들(특히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눌렀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나서서 "고용의 이자만 낼 수 있다면 돈을 빌려주겠다" 하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깜짝할 사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환상이 광범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나 2006년에 금융 전문가들

은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고 영원히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미국인들은 돈을 빌렸고, 그 덕분에 다른 나라 자본가들은 하마터면 못 팔았을 물건을 미국인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에 물건을 팔아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 성장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도 중국에 원재료를 팔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이 세계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자본가의 이윤 — 그리고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 자본가들의 이윤 중 일부 — 이 미국 은행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자본가들은 여기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품이 발생했고, 자본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이에 의존해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에도 묘사했던 지난 5년간의 주택 거품은 그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을 낳았습니다.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이윤을 회복하려고 노동자들(특히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눌렀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나서서 "고용의 이자만 낼 수 있다면 돈을 빌려주겠다" 하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깜짝할 사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환상이 광범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나 2006년에 금융 전문가들

은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고 영원히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미국인들은 돈을 빌렸고, 그 덕분에 다른 나라 자본가들은 하마터면 못 팔았을 물건을 미국인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에 물건을 팔아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 성장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도 중국에 원재료를 팔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이 세계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자본가의 이윤 — 그리고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 자본가들의 이윤 중 일부 — 이 미국 은행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자본가들은 여기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품이 발생했고, 자본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이에 의존해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에도 묘사했던 지난 5년간의 주택 거품은 그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을 낳았습니다.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이윤을 회복하려고 노동자들(특히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눌렀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나서서 "고용의 이자만 낼 수 있다면 돈을 빌려주겠다" 하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깜짝할 사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환상이 광범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나 2006년에 금융 전문가들

진국 은행이 파산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대단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이중의 위기입니다. 금융 호황과 미친 대출금이 없었더라면 세계경제는 이만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황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행 시스템 붕괴에 따른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들도 더는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체제 전체가 엄청난 공포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각 정부는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 시스템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은행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거란 희망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진지한 분석가들의 글을 읽으면, 어떤 이는 은행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반년이나 1년 뒤 다시 찾아올 거라 예측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윤이 아닙니다. 정부들은 은행 시스템을 구하려고 엄청난 돈을 썼고, 어디선가 그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세금 수입보다 10퍼센트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일부 자본가들의 주장이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과거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더는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은행가와 기업가가 위기를 일으켰지만 우리한테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가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부를 가지고 도박판을 벌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자본가들의 압력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고, 노동자들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도박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 과정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자본가들은 "우리가 만든 실수를 너희가 책임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불러모지 않았다. 우리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이성적 체제에 살고 있다면 이런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대가를 떠넘기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를 해결하려면 공장을 폐쇄하는 등 더 적게 생산해야 한다"는 자본가들의 주장만큼 황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폐쇄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싸우는 남한·영국·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이 자체로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투쟁은 자본가들에게 위기의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경제 위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 10편으로 이어짐



특집

정리 발언

▶ 9면에서 이어짐

어떤 분은 [6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우익이 승리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우익이 승리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진실입니다. 중도좌파가 집권중이거나 최근에 집권했던 나라에서 사람들은 중도좌파에 실망해 그들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

다. 한국에서도 중도좌파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정부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중도좌파의 문제는 그들이 자본주의라는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는 고양이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중도좌파는 나중에 이 호랑이를 길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호랑이에게 속죄양을 던집니다. 그러니 중도좌파를 당선시켜 준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동당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민당(SPD)이 우익 정당과 연정을 꾸린 독일에서도 그랬습니

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분은 노동계급이 전 세계 인구의 과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급에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의사, 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등. 자본주의에서 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자본주의에서 부를 통제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이 부를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물려받았거나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부를 소유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바로 이 소수가, 전 세계인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의지하는 수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를 생산하는 것은 그 소수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은 자동차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는 자동차 퓨즈를 갈아 끼우는 법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

다. 산요 회장도 전자레인지

를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하는 체제를 가지면 안 됩니까? 이론 상으로 남한 노동자 — 교사, 의사, 자동차 노동자, 환경미화원, 간호사 등 — 가 노동자 대표자 회의에 보낼 노동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한국 경제가 무엇을 생산하고 누가 거기서 혜택을 누릴지 결정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론만 추구하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일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현재 부를 보유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에 반대하는 자동차 노동자들처럼 누군가 그 소수의 뜻을 거스르려 하면, 그들은 경찰을 보내 그 도전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반복되는 이 체제를 제거하고 싶다면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철저히 변화해야



1937년 미국 GM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 대공황 속에서도 경제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서 승리한 노동자들. 지금도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

합니다.

어떤 분은 ‘사회를 바꾸는 것은 위험이 큰 일인데 과연 우리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해야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체제를 뒤집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체제를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면 당신이 다른 학생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학교는 당신을 내쫓을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는 작은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저들은 당신이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까 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찰 병력을 동원해 당신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작은 변화를 원하더라도 당신을 지지하고 집단적 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 대다수 많은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실, 지배계급은 대단히 강력하지만, 만약 대다수 사람들이 조직되고 전투적으로 싸우려 한다면 지배계급의 힘은 갑자기 별 볼일 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대중적인 노동자 투쟁이 발생하면 폭력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쟁하는 사람들이 단결해 있지 않고 분열해 있을 때,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충분히 단호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배자에게 양보하면 저들도 우리에게 잘해 주지 않을까 하는 환상이 있을 때 저들은 폭력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1980년 항쟁이 발생했을 때 한 지역(광주)에서만 일어났습니

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혁명을 보면, 먼저 사람들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연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한 집

단이 투쟁을 시작하면 다른 집단이 연대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배계급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감히 대량 폭력 사태를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지배자들 중 소수는 끝까지 사회주의 혁명에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와 군대의 소수 엘리트 분파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려면 조직된 노동계급이 그들을 무장해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약간의 폭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이 무차별 폭력을 수반한다는 상투적 주장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지배자들은 잔혹합니다. 여러분이 지배자들과 싸워 세상을 정말 살 만한 곳으로 바꾸려 한다면, 지배자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조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집단의 사회 변혁 투쟁에 연대를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 혁명가들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의 거품과 군비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 때 시간이 부족해서 좀 단순화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해 10월에 쓴 팸플릿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썼습니

다. 내 논문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에 그 팸플릿도 수록된 걸로 알고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좀더 자세한 분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또 다른 거품을 조장하는 방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중매체에 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대안 언론도 때로는 몸집 — 판매 부수나 웹사이트 방문자 수 등 — 에 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관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평판을 얻으면, 사람들은 종종 거짓말하는 주류 언론보다 그 대안 언론을 훨씬 진지하게 대할 것입니다. 투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

다. 영국에서 우리 단체는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를 발간하는데, 보통 호당 몇천 부 정도 팔립니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 신문을 집단으로 수백 부씩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쟁할 때 파파 신문을 사서 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류 언론조차 대규모 투쟁이 발생하면, 그 소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런던에서 금융 자본가들에 항의하는 큰 시위가 벌어지자, 갑자기 모든 주요 일간지들이 이 시위를 호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기 독자들이 은행가들을 증오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문들은 하루 이틀 호의적 보도를 한 후에 원래 보도방식 — 한편으로 연예인들을 찬양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 으로 돌아갔습니

다. 그러나 그들도 때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호소할 때 그들은 자본주의에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이윤의 원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자본주의와 대적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미 청중토론 시간에 몇몇 분이 이 문제에 답했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노동을 좀더 유리하게 팔도록 돕는 것을 자신의 구실로 봅니다. 그래서 종종 마치 재래시장에서 옷을 파는 장사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협상력만이 중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

다. 그래서 투쟁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때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호소할 때 그들은 자본주의에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이윤의 원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자본주의와 대적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노조에서 소수이지만, 자신에게 호의적인 환경에서 소수입니다. 노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집단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사회주의자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작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노동자 모두가 단결한다면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노조에 속해 있지만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는 노조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연재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⑥ — 마지막 편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듣기엔 그럴 듯하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긴다. 존 롤리뉴가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사회주의가 실제 어떤 모습일지 살펴본다. 존 롤리뉴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이자 포츠머스 대학교 예술사와 철학 교수이며 <레포트21>의 해외 칼럼니스트다.

자본주의가 고장 났다. 그럼 대안은 뭐지? 지난 몇 달 동안 신용 경색, 금융 붕괴, 경기 침체가 정신없이 이어지는 것을 지켜본 전 세계 수백만, 어쩌면 수억 명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 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예컨대 정치인들, 언론, 교육, 또 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경험 등이 전할 대답이 '자본주의의 대안은 없다'라는 게 문제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자본주의의 대안이 없다는 점만은 똑같다. '신' 케인스주의자, 고든 브라운, 어쩌면 버락 오바마가 대변하는 수정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명쾌하고 분명한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제시된 것은 벌써 1백60년 전 일이다(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8년에 《공산주의자 선언》을 썼다). 사회주의는 매우 직설적이고 자본주의에 비해 극히 단순하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 주요 생산수단(토지, 공장, 기업체, 은행 등등)에 대한 통제,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른 생산, 계급 분단의 철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지 현실이 되기에 너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자본주의 아래서 끈적하게 억눌리고 그에 따라 자신감을 잃으면서 사회주의처럼 명백히 합리적이고 훌륭한 대안이 현실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게 된다. 우리 삶이 그와 한참 동떨어진 것만 봐도, 틀림없이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이란 식이다.

이 글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첫째, 사회주의가 현실이 되기에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운영하는 데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 데올로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반대 논거들이 사실은 현실과 거리가 멀고 심지어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는 점. 내가 얼토당토않다고 말한 까닭은, 머릿속 깊숙이 자리잡은 편견 때문에 사람들은 논쟁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의지하는 편견들이 사실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현실의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한 줌의 연기로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963년 브리스톨에서는 흑인 노동자들의 버스 운전을 허용할지를 두고 한바탕 논쟁이 있었다. 일부 인종차별주의자들은 흑인들이 버스 운전이 필요한 순발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벨레와 무함마드 알리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다니!)

1974년 안젤라 리폰이 여성 최초로 <BBC 9시 뉴스> 정규 진행자가 되기 전에는, 일부 구닥다리 성차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여성이 보도하는 기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팽배했다. 인종 또는 성에 따른 노골적 차별이 사라지면서 이런 주장들



맥도널드 앞의 걸인 - 음식과 주택은 부족하지 않은데 거리의 걸인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도 자취를 감췄다.

인간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즉 먹고사는 문제에서 출발해 보자. 오늘날 세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생산성을 자랑할 정도로 풍족하다. 그러나 UN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오늘날 9억 6천3백만 명이 기아와 아사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매일 약 2만 5천 명(대부분 아이들)이 기아나 그와 관련한 질병으로 죽어 간다. 이게 음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식량 · 개발 정책 연구소 — 푸드퍼스트'란 싱크탱크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오늘날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3천5백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밀과 쌀 등 곡물들이 생산된다. 이 수치는 심지어 사람들이 흔히 먹는 식품들, 예컨대 채소, 콩류, 견과류(호두, 밤 등), 근채류[무, 감자 등], 과일, 쇠고기, 생선 등은 제외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인당 최소 4.3파운드(약 2킬로그램)의 음식, 즉 곡물 · 콩류 · 견과류 2.5파운드(약 1킬로그램), 과일과 채소 1파운드(약 0.5킬로그램), 고기 · 우유 · 계란 1파운드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된다. 사람들 대부분을 비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대부분도 현재 그들 나라 국민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갖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농산품 수출국이다."

교통수단이 문제일 수도 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아마 식량을 전달받지 못할 만큼 생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 상당수는 켈케타나 리우데자네이루, 다카 같은 대도시에 산다. 이런 도시

에는 비행기가, 때때로 여행객들을 싣고 매일 오간다. 심지어 이들이 농촌의 난민 캠프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TV 카메라 기자들은 원할 때 언제든지 그곳에 간다. 또 우리는 폭탄을 실은 폭격기들을 지구상 어느 곳이든 배치할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식량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이들 수천 명이 굶어 죽든 말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UN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또 옥스팜과 세이브더칠드런처럼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사람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국제 구호단체들도 많다. 가난한 나라에 가 보면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NGO들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기아와 영양 부족은 계속된다. 도대체 왜? 여기 한 가지 해답이 있다. 기아 문제를 다루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UN 산하 모든 기관과 구호 단체들도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바로 빈곤이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필요한 식량을 구입할 여력이 안 돼서 굶주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아이 4명을 둔 부모가 창고에 식량을 가득 쌓아 놓고도 자식 한 명이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죽어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현실에서 빈곤이 기아를 낳는 이유를 구호 단체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식량이 자본주의 사회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시장에서 판매해 이윤을 얻으려고 생산되는 상품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기아 문제를 가장 손쉽고 또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즉, 식량을 상품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저 잘 분배하기만 해도 이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은 없을 것이다.

분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굶주리는 아이는 더는 없을 것이다. 영양실조로 불룩 튀어나온 배도, 생기 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이 초착취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거나 노인들이 길가에서 죽어 가거나 거지들이 먼지 가득한 바닥에서 기어 다닐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엄청난게 많은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설사 사회주의가 성취한 게 이것뿐이라 할지라도, 이것 하나로도 얼마든지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는 현실이 되기엔 너무 이상적이다. 틀림없이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머릿속에 미리 입력된 '표준적인 반대 논거들'이 제기된다. 만약 식량이 무료로 분배된다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일을 멈추진 않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 문자 그대로 굶주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영국 전체에서도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만일 당신이 굶주리고 있다면, 당신은 곧 일할 기력을 잃게 될 것이다. 훌륭한 식단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생산적으로 일한다.

실제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거대 기업들이 더는 식량을 통해 이윤 수십조 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식량 분배가 가능하다면 다른 것들, 예컨대 주택 같은 것도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거는 인간이 사는 데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심지어 미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들에서도 노숙자는 흔히 볼 수 있다.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거대 도시에 있는 빈민가 · 판자촌에 가 보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사회주의적 계획이 이 문제를 아주 간단히 해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을 살펴보자. 엄밀히 말해 영국에 주택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값싼 주택이 부족할 뿐이다. 무주택자들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려면 빈 집과 저택, 부자들의 잉여 주택들을 몰수해 분배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영구적인 대안을 떠올리기도 어렵지 않다. 인구 조사를 활용해 인구 대비 주택 수요를 예측하고(이미 이와 같은 일이 실시된 바 있다)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세운다. 벽돌공, 목수 등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해 실제 필요한 것보다 약간 많은 주택을 건립한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권리를 갖고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모든 시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가정 또는 개인이 하지만 질 좋은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기본 권리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주택을 상품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똑같은 원칙을 교통수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오늘날 교통체계는 한마디로 쓰레기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아래 교통체계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오늘날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인데, 자동차 보유가 너무 보편화한 나머지 도로는 꼭 막혀 버렸고(심지어 런던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세기에 마차를 이용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됐다.

사회주의적 해결책은 명백하다. 각종 교통수단이 연결된 무료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송용 철도, 또 도시 간 이동용 철도 등을 대거 확충해야 할 것이다. 철도가 자동차나 화물차보다 더 빠를 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크고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도심에서 이것은 전차와 버스, 지하철, 모노레일, 미니버스, 자전거 등을 결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세부적인 묘사가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대중교통이 충분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효과적이라면, 도시에서 자가용과 그것이 불러온 각종 문제들, 예컨대 주차, 교통체증, 교통사고, 석유 연료와 공해 등을 없앨 것이라ں 점이다.(대중교통이 충분히 확장될 수만 있다면 농촌에서도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계획

이런 식으로 음식 · 주택 ·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료와 교육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불가피하게 제기되

▶ 12면으로 이어짐

리뷰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김하영, 책갈피, 6,900원, 191쪽)

생생하고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는 NGO 해부



지난 몇 년 동안 NGO 위기론이 여러 번 제기됐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다양한 글들도 쏟아져 나왔다.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도 이런 NGO 위기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김하영의 글이 기존 NGO 위기론을 다룬 여러 책들보다 돋보이는 이유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 NGO들의 기원과 사상, 실천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NGO의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대신 마르크스주의가 한물 갔다는 식의 관점이 확대됐기 때문에 NGO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좌파적 이론은 실종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낳은 이론(신사회운동론 등)으로 위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는 종종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거나 똑같은 문제를 답습함으로써 위기를 재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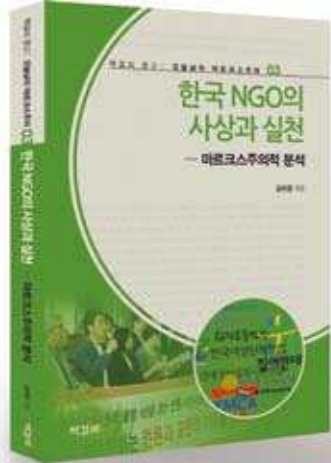
NGO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없는 데는 한국 좌파의 오류도 한몫했다.

좌파 안에서는 NGO에 대한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NGO의 사상과 실천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실용주의적 태도로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NGO를 그저 체제의 부속물일 뿐이라며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었다.

김하영은 이런 두 극단을 모두 비판한다.

“나는 NGO를 개혁주의의 한 유형으로 분석했다. NGO는 사회의 근본적 변혁이라는 전망을 상실한 채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개혁해 정의·평등·공동체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혁주의로 볼 수 있다. 물론 집중된 운동을 건설하려 하지 않는 등 NGO의 독특한 조직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NGO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태도 즉, 비판적 지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개혁주의가 위기인 동시에 여전히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우리는 이 아난의 시대에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NGO 활동가·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나 한두 켤매에서뿐 아니라, NGO적 비전을 넘어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투쟁에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이자 소망이다.”

개혁주의의 한 유형

이런 균형잡힌 관점 덕분에 저자는 ‘NGO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일고의 망설임도 없다. 특히 저자는 그동안 다양한 운동들에서 만난 NGO 활동가들 등의 말을 직접 인용해 그들이 겪는 혼란과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NGO의 등장과 성장 배경을 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에서 찾거나 ‘민주화’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다른 학자들과 달리 김하영은 NGO가 크게 성장하던 시기의 사회적 변화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1990년대 초에 시민운동이 부상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하나는 1987년 대중투쟁의 결과 권위주의에

서 자유민주주의로 불안하게나마 전환이 시작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옛 소련 블록의 붕괴였다. ... 동구권 붕괴에 따른 환멸감, 국내 상황 변화에 따른 변혁 전망의 상실이 결합된 배경 속에서 ... 활동가들은 1990년대 초반 내내 고민을 거치며 시민운동 진영으로 발길을 옮겼다.”

물론 당시에도 모든 활동가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소수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전부터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혁명의 국제적 고립과 내전 등으로 ‘관료적 왜곡’을 겪었고, 결국 1928~1929년 스탈린주의 관료의 반혁명으로 완전히 질식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1990년대 초에 붕괴한 것이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국가였을 뿐이라고 이해했지만 대다수 좌파는 커다란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제 계급적 관점 대신 시민사회론이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사상으로 완전히 기울거나 적어도 한 발 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기게 됐다.

저자는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다함께 주최 진보포럼 ‘맑시즘2009’의 한 강연에서 김정훈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들의 사상적 궤적을 설명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람시 이론을 통해 경제결정론에서 탈출했고, 하버마스 이론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적 작동 원리를 파악했다. 그리고 신사회운동론을 통해 계급적이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인 사회운동론을 이론화했다.”

그러나 저자는 마르크스주의자인 그람시의 저작을 시민사회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제 눈에 물 대기’라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유팔무교수의 지적대로 시민사회론은 “그람시 이론에서 항상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거나 전제돼 있는” 계급적 관점을 완화하거나 제거했기 때문이다. “유팔무 교수는 당시에 자신이 ‘마르크스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수정’하는 데 ‘그람시를 투입’했다고 술화한 바 있다.”

저자는 하버마스, 코헨, 아라토 등 시민사회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이론적 논의들도 진지하게 살펴보기만 이런 이론적 논의들이 생생한 증언과 사례와 결합돼 전혀 지루하지 않다.

사실 NGO의 사상에 대한 비판보다 더 금기시돼 온 것은 바로 NGO들의 실천에 대한 비판이었다. 진보 학자들도 그 사상에 담긴 모순에 대해서는 종종 비판을 해 왔지만 실천에 대해 말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예컨대 NGO 이론가들과 활동가들이 대체로 공유하던 전제와 그 실천 즉, ‘대중행동의 시대는 갔다 — 엘리트주의’, ‘시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 제3의 길’, ‘행동을 통일하려는 시도는 대중의 자발성을 짓누른다 — 만장일치제, 자발성주의’ 등은 NGO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이나 좌파 일각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 책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있다. 앞서 말한 ‘비판적 지지’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 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뿐 아니라 자신이 사회 운동의 일부라고 느끼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사진: 제문 민중의소리

▶ 11면에서 이어짐

는 문제가 있다.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대지?” 최근 몇 달 사이 파산 직전의 은행을 구하는 데만 천문학적인 돈이 쓰인 상황에서, 이 질문은 별로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사고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간단히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오늘날 NHS와 공교육, 군사비와 전쟁 비용이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음식·주택·교통수단이 모두 확실히 무료로 제공된다면, 사람들이 세금으로 낼 돈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돈 그 자체가 부·상품·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오직 자연에 인간의 노동이 더해질 때만 가치가 만들어진다. 돈은 단지 상품화한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상품으로 여겨지는 제품과 서비스가 줄어들수록, 돈의 구실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사회주의는 상품 생산이 궁극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이것이다.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기 적당할 만큼 식량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데, 모든 구성원에게 부족

함 없이 주택을 제공하는 데, 모든 구성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기차·전차·버스 등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집단적으로 소유한 산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를 위해선 기껏해야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공무원이나 최악의 경우 괴물 같은 독재자가 되기 마련인 국가 관료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한편에 스탈린의 러시아와 김일성의 북한이 있고, 다른 한편에 영국 철도와 NHS가 있는 20세기의 국가 소유·계획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은 자연스럽고

또 중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사회주의적 대안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과 연결돼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사회주의자들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거나 대중의 능동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주의로 옮겨가는 조정기에는 분명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가능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 노동계급은 사회를 운영할 수 없어. 그들은 그럴 만큼 영리하지 못해. 그들은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고 경영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어. 게다가 늘 그렇듯 누군가 지도적 위치에 오르면 그 사람도 이득을 취하기 바랄 거야.”

노동자들의 능력을 확인하려면 당신이 알고 있는 주변 직장을 한번 살펴보자. 경영자가 아프거나 휴가를 가서 자리를 비우면, 그 회사의 일이 그대로 멈추던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부총장이 부패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가 결국 해고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은

집단적으로 소유한 산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민주적이지 않거나 대중의 능동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됐다. 반면, 만약 대학에서 가장 낮은 봉급을 받는 건물 관리인이 일을 하루라도 하지 않는다면, 사무실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지도적 지위에 올라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간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주체가 자본주의 아래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직자도 천사도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그런 개인들을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최초로 노동자 권력을 진지하게 실험한 1871년 파리코뮌 이래로 우리는 이 시스템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즉, 모든 공직자들은 대중에 의해 선출돼야 하고 소환될 수 있으며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통해 이런 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하려면 집단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작업장과 이런저런 기관들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바탕을 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 점이 바로 1905년 러시아 혁명 당시 최초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노동자들이 구성한 소비에트, 즉 노동자평의회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다. 1917년

10월 혁명과 뒤이은 투쟁을 통해 소비에트는 노동자들이 사회 전체를 통치하는 정치 권력을 구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라는 점을 거듭거듭 보여 줬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불평등과 계급 분단을 없애고, 경제를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고, 세계 평화와 통합을 구축하는 등 사회주의가 가져올 모든 변화들이 가능하려면 먼저 노동계급이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 이 혁명은 처음엔 한 나라에서 시작하겠지만 곧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다. 노동자평의회는 혁명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기구로 출발해 대중 파업과 공장 점거를 거쳐 성장한다. 그리고 옛 자본주의 국가에 맞선 대안 권력의 중심으로 발전해 결국 혁명의 결정적 국면에서는 자본가 권력을 대체해 노동자 권력을 수립한다. 현대 세계경제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객관적 지위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는 이 권력은 수천만 명의 창의적 에너지와 재능을 해방시켜 끌어낸다. 일단 노동자 권력이 수립되면, 더 나은 세계는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바뀔 것이다.

번역: 조명훈 기자

리뷰



《차이나프리카》(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에코리브르, 16,000원, 317쪽)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1980~2005년 중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 5배 증가, 2000~2006년 무역량 5배 증가, 중국 기업 9백 개 아프리카 진출. 2007년 프랑스를 제치고 아프리카 제2의 무역국이 될 중국은 도대체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어떻게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는가?

〈르몽드〉의 서아프리카 특파원 세르주 미셸과 스위스 시사주간지 〈레브드〉의 외신부장 미셸 뵈레는 1년이 넘도록 아프리카 열다섯 국가와 중국을 오가며 취재해 나름의 답을 《차이나프리카》에 담았다.

왜 중국은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일까? 아프리카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매장지를 가졌다. 이뿐인가. 최근 들어 중요성이 급증한 우라늄, 티타늄, 탄탈륨 등이 상당량 매장돼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이는 국가가 중국만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 본국이 득실대는 유럽, 몇십 년 전부터 이들과 경쟁해 온 미국, 최근 들어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어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프리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제국주의가 활궤고 간 상처로 빈곤과 상시적인 내전이 뒤엉켜 아프리카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쟁탈전은 북마전이 돼 버렸다.

그렇다면 이런 북마전에서 어떻게 중국은 살아남아 중요한 교역국이 됐을까? 저자들은 ‘베이징 컨센서스’가 그 답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찬양하는 민영화, 탈규제, 민주주의와 투명성 제고라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쓰디쓴 처방전” 대신 아프리카 정부들이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석유와 중요한 금속 자원의 채굴·개발권을 주지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은 아프리카 53개국의 친구라고 자처하지만 중국의 투자 지도는 정확히 산유국에 집중돼 있다. 앙골라, 나이지리아, 수단, 콩고공화국, 가봉에 중국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국가 중 대부분은 오랜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앙골라는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후

27년 동안 참혹한 내전이 벌어져 국민들은 어떤 사회안전망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5세 미만 어린이가 3분에 한 명씩 굶주림이나 병으로 죽어 간다. 앙골라는 석유 판매 수입으로 연간 3백억~4백억 달러 수입을 올리지만 ‘특별 앙골라인’ 수백 명의 배반 불려 왔다.

냉전기에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앙골라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과다한 채무와 부패를 구실로 IMF가 권장하는 ‘좋은 거버넌스’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부국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 중국은 이때 앙골라에 손을 내밀고 단기간에 1백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 액수는 지금까지 앙골라가 받은 원조액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베이징 컨센서스

수단은 어떤가. 저자들은 수단의 사례를 들며 “중국이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국제 사회에서 ‘왕따’와 동맹을 맺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다. 중국 또한 석유 수입량 중 10퍼센트를 수단에서 충당하고 있다(중국은 석유 필요량의 30퍼센트를 아프리카에서 충당한다). 2003년 수단 다르푸르 사태로 수단인들이 2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수단 정부가 종족 하나를 통째로 없애 버렸다는 의혹이 나올 정도로 ‘대량 학살’이 벌어졌으나 중국은 2005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실상 수단 정부를 옹호했다.

저자들은 앙골라와 수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중국이 독재 국가를 후원하고, 친중 정부를 세우기 위해 반군에 돈과 무기를 대 주고, 정부 관리를 매수하며 영향력을 넓혀 왔다고 생생히 고발한다.

그리고 저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다고 비난하는 서방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영국에서는 독재 정권에 대한 무기 판매가 무려 네 배나 늘었다.” 또, “인권의 중추국이라 자처하는 프랑스가 온갖 불

법 거래와 범죄, 비리 등을 묵인하는 조직”을 아프리카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서방 역시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관계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과 부패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저자들도 “중국이 아프리카 석유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 미국은 강박증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팽창을 ‘봉쇄’해야 한다는 등 냉전 시대에나 쓰던 용어까지 다시 등장했다.”

2007년 미국이 에티오피아를 부추겨 소말리아를 침략해 전쟁을 벌이게 하는 동안 중국은 소말리아에서 석유 채굴권을 따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아프리카통합사령부(AFRICOM)를 2007년 6월 신설했고, 2008년 10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근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아프리카를 순방하면서 소말리아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을 제거하는 데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아프리카를 ‘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선에 놓고, 경쟁국들에 패권을 뺏기지 않을 심산이다. 이 때문에 평범한 아프리카인들은 더 많은 비참과 절망을 겪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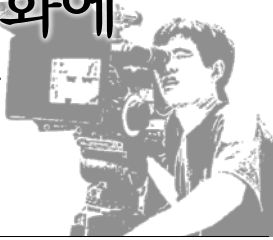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들이 기자정신을 발휘해 위험 부담도 마다 않고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며 쓴 글이라 중국의 악행과 성장 배경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아프리카 기층 민중들이 오랜 식민화 경험과 저발전 상태 때문에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결론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이제 공은 아프리카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이 책 곳곳에서 지배자들이 자국민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폭로했듯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아프리카의 비극은 지속될 것이다.

김덕엽

우원석 영화칼럼

스포츠 영화에 관한 단상



나는 스포츠 영화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스포츠 영화들, 특히 한국의 스포츠 영화들 대부분은 어설픈 휴머니즘적 감동만 서툴게 쫓는다. 또, 스포츠 영화의 핵심인 경기 장면들은 TV 스포츠 방송중계의 보수적인 미학 - 경기에 선수로 참가한 인간들의 살벌한 경쟁을 근사하고 멋진 볼거리로만 포장하는 촬영방식 - 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7), 최근 개봉한 〈킹콩을 들다〉, 〈국가대표〉 등이 그런 경우다. 이 영화들은 〈말아톤〉(2005)처럼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과 비인기 종목 스포츠를 결합해 역경을 만들고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그런데 주인공 한 개인에게 깊게 집중해서 밀도 높은 드라마를 성취한 〈말아톤〉과 달리, 이 영화들의 눈물샘 공략 작전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 캐릭터들은 대체로 피상적이고 드라마 전개는 아주 쉽게 예측가능하며, 실화에 기초를 뒀다는 설정을 이용해 감동을 손쉽게 쥐어짜내려고만 한다.

게다가 이 영화들의 경기장면들은 경기를 근사한 볼거리로만 다루는 TV 중계 수준이다. 가령 〈국가대표〉의 경우,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하며 멋진 스킷 점프 장면을 보여 준다. 하지만 제 아무리 멋져도 스포츠 채널에서 흔히 보는 장면들과 다를 바 없기에 근본적으로 진부하고 식상하다.

물론 스포츠라는 소재를 통찰력 있게 다룬다면, 스포츠 영화는 케케묵은 신파적 감동과 TV 중계의 낡은 미학을 뛰어넘을 수 있다. 영화사상 가장 멋진 오프닝 장면이 담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스포츠 영화로 꼽히는 마틴 스콜세지의 〈 분노의 주먹〉(1980)이 단적인 예다.

스포츠와 삶의 맨 얼굴

이 영화는 권투 영화지만 경기 장면들이 TV 중계처럼 관객들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진 않는다. 오히려 영화는 사각의 링을 삶의 지옥도로 묘사한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인간들의 육체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이를 통해 스포츠와 삶의 맨 얼굴, 즉 생존과 성공을 위한 참혹한 경쟁을 깊이 있게 보여 준다. (주인공 제이크로 분한 로버트 드 니로의 연기는 전설적이다. 그는 은퇴 후 쇠락한 복서의 모습을 담은 영화 후반부를 위해 촬영 도중 몸무게를 23kg이나 늘리기도 했다. 요즘 배우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위해 살을 일부러 찌우거나 빼는 것은 모두 드 니로의 영향을 받아 그렇다.)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더 레슬러〉(2008) - 그의 데뷔작 〈파이(Pi)〉(1998)는 카프카의 소설들을 질계 연상시키는 초자연상 스릴러인데 매우 탁월하다. 스릴러 팬들은 꼭 보시길 - 도 마찬가지다. 몰락한 늙은 프로 레슬러의 삶을 다룬 이 영화는 경기를 결코 볼거리로 포장하지 않는다. 대신, 한물 간 인간들이 링 위에서 벌이는 슬픈 삶의 각축장으로 경기를 묘사해 강렬한 영화적 감흥을 자아낸다. 영화는 장편 영화에서는 잘 안 쓰는 수퍼 16밀리 필름으로 촬영돼, 거친 입자의 화면, 멋지진 않지만 정직한 화면의 미학을 구현하기도 했다.(주인공으로 나오는 미키 루크의 연기도 놀랍다. 그는 경기 중 면도날로 이마를 그어 피를 흘리는 장면을 위해, 특수 분장을 거부하고 자기 이마를 실제로 긋고 진짜 피를 흘렸다.)

스포츠 영화는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TV 시청자의 단순한 관점을 벗어나 경기를 해석할 때 새롭다. 스포츠라는 전쟁터 속의 인간들을 카메라가 좀더 솔직하게 주목할 때, TV 중계 이상의 감흥이 창조된다.

위의 두 영화와 함께, 〈지단 - 21세기의 초상〉(2006)과 〈천하장사 마돈나〉(2006)를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지단 - 21세기의 초상〉은 경기종인 축구 스타 지단을 17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담았는데, 축구의 재미와 지단이라는 세계적 아이콘을 영화적으로 해체해 버린 흥미로운 실험적 다큐멘터리다. 〈천하장사 마돈나〉는 여자가 되고 싶은 동보 소년이 성전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씨름 대회에 나가려 한다는 내용의 캐릭터 드라마인데, 따뜻하고 독특한 재미를 주는 수작이다.

우원석

영화감독 / 뉴욕에서 영화 공부를 했고 지금 작품을 준비중이다.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데니스 에이버리, 프레드 싱거, 동아사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책

최근 〈경향신문〉은 데니스 에이버리, 프레드 싱거 등이 쓴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서평을 실었다.

진보적 언론으로 여겨지는 〈경향신문〉 편집진이 왜 대표적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에이버리와 싱거의 책을 소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 다른 견해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돈과 시간 투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보인다”는 취지라면 저자들의 의도에 말려든 셈이다.

책에 담겨 있는 과학적 정보들의 일부는 진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60~80퍼센트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저자들의 결론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 기후 변화는 단순히 자연의 순환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의 기후 변화에 기업들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저자들은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 눈에 물 대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의 기온 상승이 1천5백 년 단위의 기후 변동일 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과학자 수천 명이 동참한 유엔 산하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 보고를 보면 지난

65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단 한 번도 3백ppm을 넘은 적이 없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될 무렵인 175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5년 현재 3백79ppm이다. 지난 65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온도는 거의 언제나 함께 오르내렸다. 그리고 고기후학 연구들은 수억 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6℃ 가까이 오를 적이 있음을 보여 준다. 대규모 화산 폭발 등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된 결과였는데, 당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95퍼센트가 멸종했다.

그런데 저자들은 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일까? 지구온난화가 진행중이고 그 원인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화석연료(석유, 석탄) 기업들과 자동차·시멘트 기업들은 혹여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는 산업이 위축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한편 지구온난화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연구소들을 설립했다.

그들의 전략은 지구온난화론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몰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반론은 진지한 사회적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미국의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은 2007년 1월 발표한 ‘진실 은폐와 온난화’라는 보고서에서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싱거가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 중 하나인 엑손모빌이 후원하는 연구소 11곳에 가입해 있고 그 자신이 설립한 “과학과 환경 정책 프로젝트” 연구소는 엑손모빌에서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데니스 에이버리가 속한 허드슨 연구소는 엑손 모빌에게서 2만 5천 달러를 받았고 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벌어지던 당시 필립모리스 사에게서 15만 달러를 받았다.

허드슨 연구소는 몬산토, 카길 등 세계 최대 농화학, 식품 기업에서도 후원을 받는데 데니스 에이버리는 1993년에 “유기농 식품이[유전자 조작이나 농약을 사용한 식품에 비해] 더 많은 암을 발생시킨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보들이 과연 사실인지 더 알고 싶다면 저명한 환경운동가인 조지 몬비오가 쓴 《CO2와의 위험한 동거》(홍익출판사)를 추천한다. 프레드 싱거가 인용한 연구소들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몬비오가 직접 들은 말은 프레드 싱거의 주장이 “완전히 쓰레기들”이라는 것이었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③

양과 질의 변증법

역사에서 뜻밖의 질적 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존 리즈는 양질전환을 이해할 때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 위기가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를 보자. 흔히 이런 위기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은행은 파산하고 금융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고 불황이 우리 발밑에서 깊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태의 흐름이 갑자기 단절된 예는 경제 위기만이 아니다. 9·11 공격과 그 결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전환점이었다. 그 후 세계의 수많은 중요한 일들은 완전히 달라졌다.

1989년에 역사를 바꾼 또 다른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다. 이 사건은 세월이 흘러도 바뀔 것 같지 않던 사회에서 불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본래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분석하는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의 정수다. 역사에서 이런 특정 형태의 급변이 자주 반복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을 발전시켰다.

그 수단의 하나로 변증법이 있다. 변증법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대화’다. 이 철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대립하는 관점 사이의 충돌을 뜻하는 ‘대화’가 진실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진실은 단일한 관점이 아니라 이런 토론과 논쟁의 과정이다.

논쟁에서 서로 다른 견해의 모순을 통해 사상이 발전한다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경제와 국가 같은 사회 제도들이 모순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한다고 본다면, 변증법적 방법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논쟁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견해의 충돌을 통해서 진실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나 국가가 모순 때문에 발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제도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고정불변의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기는커녕 모순된 추동력 때문에 이 제도들은 변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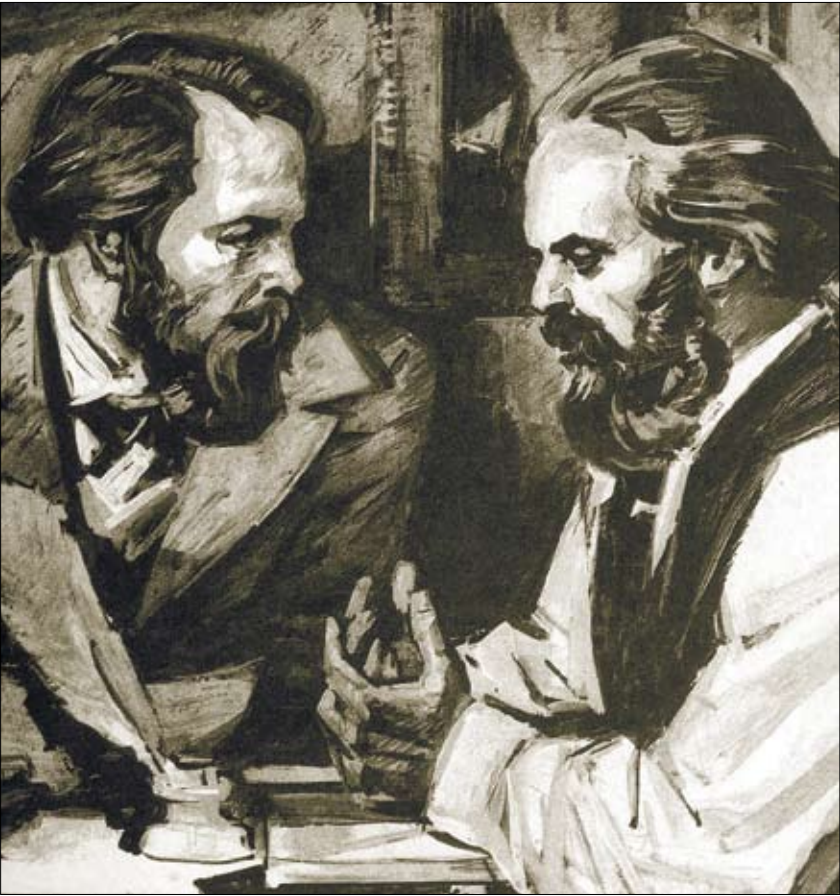
예를 들어 경쟁에 기초를 둔 시장은 끊임없이 팽창할 수밖에 없다. 모든 기업은 생산을 극대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높이고 비용을 깎으려 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런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한 결과 상품이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기업은 물건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감축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불황이 시작되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체제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집단적 생산과 이윤의 사사로운 축적의 모순에 의존한다. 소수의 특권층이 공장과 사무실과 은행 등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윤의 사사로운 축적은 필연적이다.

더 간단히 축적하려는 충동과 시장의 본질인 맹목적 경쟁 사이에 모순이 있다. 이 둘은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러나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는 없다.

국가도 자체의 모순이 있다. 국가는 모든 사회성원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계급의 이해를 대표한다. 더욱이 국가는 다른 국가와 경제적·군사적으로 경쟁한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와 협력을 아무리 외쳐도 내정 불안이나 전쟁 또는 전쟁 위협이 국가 체제에 불박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모순은 오랫동안 조용히 발전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가? 모순을 바탕으로 한 제도는 오랜 기간



변증법은 마르크스·엔겔스의 방법론의 정수였다.

서서히 변하다가 갑작스런 ‘격변’의 순간을 맞이한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지푸라기

사실 이것은 많은 다양한 변화의 특징이다. 심지어 자연계에서도 그러하다. 물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고 해서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온도가 끓는점에 이르면 물은 ‘갑자기’ 증기가 된다. 끓는점에 이르러야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이다.

물의 온도를 1도씩 낮추더라도 어는점에 이를 때까지는 두드러진 변화는 없다. 어는점에 이르러서야 물은 액체에서 고

체인 얼음으로 변환한다.

변증법적 논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양질 전환이라고 부른다. 사물의 본질이 변하지 않을 만큼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고비점에 이르면 사물의 본질 자체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갑자기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은행 산업의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고, 노동계급 생활수준에 대한 공격이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 체제 전체가 세계적 위기에 빠졌다.

이와 비슷하게 9·11사건 이면에도 오랜 점진적 과정이 있었다. 미국이 1980년대에 러시아가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을 지원했다. 빈 라덴의 모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한 정권을 지원했고 1990년대 초에 벌어진 제1차 걸프전(1991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 기지를 건설했다. 1989년 이후 미국은 새로운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진했고 탈레반을 적대했다. 이런 점진적 과정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다가 9·11이라는 고비점에 이르러서야 질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음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는 계급투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오랫동안 꺾꺾눌러 왔던 불만이 원망에 잠겨 있다 갑자기 분노로 폭발할 수 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지푸라기[더는 인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면 사소한 일격도 만만치 않다는 뜻]라는 변증법적 경우에서 보듯 최후의 모욕 한마디가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모든 파업이나 모든 새로운 저항 운동이 이렇게 일어난다. 모든 혁명은 확실히 그렇다. 지배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한다. 즉, 우리가 체제의 취약성을 깨닫고 체제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반격할 수 있는 우리 계급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두려워하는 바다.

이런 이유에서 마르크스는 변증법을 “부르주아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레닌은 “변증법적 방법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자기 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며, ‘질적 변화’와 ‘연속성의 단절’ ... 낡은 것의 멸망과 새로운 것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하고 말했다.

번역 천형석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8년 11월호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 8월 24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지면 제약 상 실리지 못한 독자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치 분석이 필요하다

〈레프트21〉의 기사를 잘 읽고 있다. 좌파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신문 중 가장 정교하고 분석적인 기사를 읽고 있어서 읽기에 즐겁다. 그러나 종종 눈에 띄는 중국 분석 기사와 달리 일본 분석 기사가 많지 않아 아쉽다.

최근 일본의 정치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8월 30일이 일본의 선거일인데, 1945년 이후 계속 우파인 자유민주당이 집권해 왔지만 이번엔 정권교체가 확실해 보인다고 한다. 물론 제1야당인 일본 민주당이 부르주아 정당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지만, 일제 패망 이후 첫 정권교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일본공산당의 약진이 다. 일본공산당은 ‘로스 제네(잃어버린 세대)’, 즉 일본의 ‘88만원 세대’의 대거 가입 등의 호재로 2008년에만 새 당

원 1만 4천여 명을 얻었다. 사상적으로는 관념적일지 모르겠지만 진보운동의 새싹이 일본에서 다시 움트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작년 한 해에만 1920년대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작인 〈개공선〉이 50만 부나 팔렸다. 심지어 올해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일본 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야스쿠니〉는 독립영화지만 일본에서 13만 명이 관람했다. 〈자본론〉도 작년 한 해에만 5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덧붙여 일본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유한 국가라서 자본주의 분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에 중국 못지 않게 일본의 정치 상황은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세만

섹시 열풍 기사를 읽고

〈레프트 21〉 11호의 정진희 동지의 글을 흥미롭게 읽었다. 최근 성형수술·다이어트 열풍이 미를 추구하는 여성의 본성이나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왜 이런 매커니즘이 작동하는지 덧붙이고 싶다.

정진희 동지의 주장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여성들이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해소되는 것도, 인생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차별 받는 여성 모두의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왜 수많은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성들이 외모에서 느끼는 박탈감과 좌절이 ‘부러움’ 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별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실제 다이어트를 하는 적지 않은 여성들은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는 ‘큰 꿈’보다는 ‘취업하고 싶어서’ 또는 ‘사랑받고 싶어서’라

는 훨씬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올해 2월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인하대학교 법대 이유정 교수는 여성 변호사·사법연수원생들을 면접조사한 결과 취업시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외모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고위직 여성들조차 취업할 때 외모차별 관행에 시달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 6월 〈문화저널21〉의 보도를 보면, 기업 인사 담당자 5백 84명 중 94퍼센트가 채용시 외모를 반영한다고 답했다. 2004년 한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뚱뚱하거나 키가 160센티미터 이하인 여성은 면접에서 감점 처리한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언론은 “이미 외모가 채용 기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여성신문)고 충고하기까지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외모 등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해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칠 뿐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용모단정’을 요구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 면접에서는 외모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란 작자가 “마사지 걸” 운운하며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외모를 빗대어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한뉴스 - 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을 만드는 정부에서 여성차별 관행을 막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 13~43세 여성의 68퍼센트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78퍼센트는 ‘외모 가꾸기가 생활의 필수요소’라고 말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제일기획 발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구직자 중 40퍼센트가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실제

2008년 한 해 동안 20~50대 한국 여성의 30퍼센트(약 2백40만 명)가 성형수술을 받았다.

2006년에는 대학 시절 유도를 했던 한 여성이 운동을 그만두고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아 취업이 안되자 자살을 하기도 했다.

즉 보통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인생역전’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하게’ 취업하고 싶어서 외모를 가꾸야 하는 현실에 내던져진 것이다. 이런 현실이 여성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온갖 상술에 피해를 보면서도 “나를 바꾸기 위해” 돈과 시간과 열정을 바치게 만든다.

결국 문제는 정진희 동지의 지적처럼 “자긍심 없는 여성 개인이 아니라 몸무게와 사이즈로 여성을 평가하는 여성 차별적인 사회에 있다.” 그러므로 여성 차별적인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성들 개개인이 외모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류민희

칼럼/논설

박상표 칼럼

돼지독감보다 정리해고가 더 무서운 나라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올봄 미국과 멕시코에서 시작된 돼지독감의 유행이 여태껏 꺾이지 않고 있다. 대유행(pandemic) 6단계를 선언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7월 초부터 공식 피해 집계마저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8월 4일까지 돼지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한 1천1백54명에 이르며, 감염자로 확인된 사람도 적게 잡아도 16만 2천3백80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감염자 수도 1천7백 명을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감염자 1천7백 명 중에서 사망자는 아직까지 단 1명도 없다.

반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총파업 과정에서 무려 4명이 가슴 아프게 희생됐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1일에 각각 1명씩 조합원 두 명이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었다. 7월 2일에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연탄불을 피워 놓은 채 자살했다. 7월 20일에는 옥쇄농성에 돌입한 노조 간부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노동자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정리해고는 더 많은 살인을 예고하고 있다”며 절규했다.

그렇다. 한국은 돼지독감보다 정리해고가 더 무서운 나라다. 현실적으로 돼지독감으로 죽을 가능성보다 정리해고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아반의 땅이다. 정리해고의 배후에는 계급스럽게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이 숨어 있다. 탐욕스러운 자본은 대테러진압용 전기충격총 ‘데이지건’과 발암의심물질을 가득 담은 최루액,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무기로 둔갑한 방패와 곤봉 등으로 무장한 경찰력이라는 든든한 스폰서를 두고 있다.

자본과 공권력 사이의 스폰서 관계는 최근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나 삼성 X파일의 뽕값 리스트 등을 통해 조금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처럼 노골적으로 그들의 관계가 공개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사측과 경찰이 합동작전을 펼쳐 농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측은 단전, 단수, 의료진 차단 등의 반인권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은 “물과 식량을 차단하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발각됐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7월 27일 의료진 출입을 전면 차단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8월 6일 애야 뒤늦게 한승수 총리가 지시해 의료진의 출입과 식수의 반입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돼지독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보건당국의 예방대책이 잘 작동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조기진단, 조기격리, 조기치료 정책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하고 감염 초기에 치료약을 투여한 것이다.

자본의 스폰서

그런데 정부는 왜 쌍용자동차 사태에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쌍용차 사태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 외에 모든 대책에서 수수방관한 것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함인가? 정부는 왜 노동자들의 농성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듯이 이른바 ‘먹튀 자본’으로 악명이 높은 상하이차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을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혈값 매각과 부실경영에 있었다. 혈값 매각은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다.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회법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 인사들과 쌍용차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이 논의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상하이차의 혈값 인수가 시작됐다. 이후 상하이차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4천2백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았으나 투자와 연구개발은 등한시한 채 엔진기술 등 핵심기술 이전과 수출만을 일삼았다. 당연히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경영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자살과 살인,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 건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실업과 관련된 자살을 미리 막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최근 의학전문지 <랜싯>에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런던대 연구자들이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유럽연합 26개 국의 자료를 분석한 ‘경제 위기 시 공중보건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지난 27년 동안 유럽에서는 실업률이 1퍼센트 상승할 때마다 65세 이하의 자살자 수가 0.79퍼센트씩 늘어났으며, 살인도 증가했다. 만일 정부가 실업보험을 비롯한 공공지출을 증가할 경우, 실업과 관련된 자살을 0.038퍼센트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의 통계만 보더라도 경제 위기 시 정부가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09년 상반기 동안 일본의 자살자가 1만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자살자 수가 역대 최고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2009년 상반기에 일본 내 자살자는 2008년 상반기보다 7백 68명(약 5퍼센트)이 증가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자살자는 경기 침체의 영향이며, 장기 침체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제 위기는 아직까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기업의 파산과 정리해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실업률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리해고가 살인이라는 반인권적인 비극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지출이 4대강 삼질 같은 엉뚱한 곳이 아니라 실업이나 고용 대책 등에 적절하게 사용돼야 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G. A. 코헨을 추모하며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좌파 지식인들에게 울여름은 참 불운의 연속이다. 지난 6월 급진 정치경제학자 지오반니 아리기와 피터 고완이 며칠 새 잇달아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주 사회주의 철학자 G. A. 코헨이 68세를 일기로 갑작스레 사망했다.

코헨은 1978년에 출간한 저서 《칼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 옹호》(이하 《옹호》)로 유명하다. 《옹호》는 두 가지 점에서 유용했다.

첫째, 이 책은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발전시키고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859년판 서문에서 간결하게 개설한 유물론적 역사 이론을 복원시켜 옹호했다. 이 이론은 사회가 생산력 발전 정도에 따라 부침을 겪는다는 역사관이다.

마르크스 시대 이래 마르크스주의 좌파 대다수는 이런 정통 역사유물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코헨은 《옹호》를 ‘순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헌사’라고 했다. 여기서 ‘순수 마르크스주의’란 코헨이 어릴 적 부모한테서, 또 냉전의 절정기에 그의 부모가 속해 있던 캐나다 퀘벡 주(州) 공산주의자 공동체한테서 배운 ‘마르크스주의’를 뜻한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이 ‘순수 마르크스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처럼 돼 버렸다. 당시 대중운동을 통해 급진화한 이들의 다수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859년판 서문에서 생산력 발전을 강조한 마르크스의 주장이 사상이나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무시한 ‘기계적 결정론’이라며 거부했다.

《옹호》의 두 번째 장점은 이런 동시대 좌파의

대세를 거슬렀다는 것이다. 1960~1970년대 운동에 힘입어 재조명된 마르크스주의는 유럽 대륙 출신의 몇몇 철학자들, 특히 게오르그 루카치, 테오도어 아도르노, 루이 알튀세르 등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이었다.

반면 코헨은 영미권 학계에서 유력했던 분석 철학을 도입해 마르크스 해석을 발전시켰다. 분석 철학은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논쟁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 조류다.

코헨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역사적 변화에서 생산력 발전이 근본적 구실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쪽으로 논쟁의 균형을 잡았다.

《옹호》가 남긴 유산 중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책에서 영감을 얻은 ‘분석 마르크스주의’ 학파가 등장한 것이다. 이 재능 있고 야심이 넘치는 학자들은 영미권 주류 학계의 철학·사회과학 연구와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키려 애썼다.

이 괴상한 시도에는 마르크스와 ‘합리적 선택 이론’을 결합하려는 노력도 포함됐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학계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데, 사회적 삶을 이기적인 개인들의 행위로 환원시키려 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파생된 이 학설은 시장을 이상화해 바라본다는 점에서 주류 경제학과 꼭 닮아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라 마르크스가 거의 사라진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분석 마르크스주의’ 학파 대다수는 “분석 마르크스주의에서 더 나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아예 기각했다.



코헨의 견해는 약간 달랐다. 그는 처음엔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기우는 데 저항했지만 나중에는 굴복했다. 그러나 그는 《옹호》에서 지기고자했던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코헨은 후기에 주류 정치 철학에 좀더 우호적으로 변했다. 그는 주로 사회정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이 이론의 핵심은 평등을 지향하는 데 있다.

코헨의 이런 변화는 주류 학계에 투항한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코헨은 지난해 퇴임할 때까지 옥스포드 대학교 사회정치 이론 교수였고, 때때로 대학 안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대한 코헨의 헌신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신노동당이 평등주의에서 후퇴하는 것을 맹렬히 비판했다. 또 그는 자신의 공산주의적 교육 방식의 일부를 학술적 성과로 이어가기도 했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주최한 ‘맑시즘’에서 나는 코헨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자기 주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는 미국 노동조합의 옛 노래 ‘연대여, 영원하라’를 불렀다(좀더 형식을 갖춘 학술 강연에서도 그는 자주 농담과 노래로 흥을 돋웠다).

옥스포드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런 철학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동시에 갖춘 그의 독특한 매력 때문에 나는 코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번역 조명훈 기자

불황 하의 마르크스주의자들 ②

트로츠키, 공동전선, 노동자 투쟁

크리스 뎀버리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편집자

1934년 2월 대형 금융 비리 사건이 터진 뒤에, 프랑스 파시스트들이 의회를 공격했다. 중도좌파 정권이 몰락하고, 강경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파시스트의 권력 장악이 임박한 듯했다. 파시스트 도당은 수만 명이 나 뻘지만, 독일과 달리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당시 러시아 혁명가인 레온 트로츠키는 1933년부터 1935년까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파시즘이 프랑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프랑스 지배자들은 19세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의 “강한 국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우익 정권은 너무 취약해서 “강한 국가”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파시스트가 점점 득세할 위험이 있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좌파도 분열해 있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은 [파시즘의] 위협에 맞서 단결된 운동을 건설하기를 거부했다. 다행스럽게도 기층 조합원들이 파시스트들의 의회 공격에 맞대응했다. 기층 조합원들의 압력을 받은 주요 노총이 하루 파업을 선언했다. 바로 그날 파리에서는 두 개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하나는 사회당과 노조 지도자들이 이끌었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이 이끌었다. 행진 도중에 시위대들이 합류해 하나의 행진 대열을 이루었고, 두 시위의 지도부는 뜻마땅했지만 지쳐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로츠키는 즉각 파시스트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파시스트의 공격에 대처할 노동자 방위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방위대는 음모적인 조직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그들의 대중 정당 그리고 노조에서 선발된 “수만 아니 수십만의 투사들”로 이뤄져야 했다.

1934년에 프랑스 노동계급은 반파시스트 투쟁에서 용기를 얻어서 더 나아가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취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공장과 조선소들을 점거했다.

행동강령

그러자 트로츠키는 1934년 6월에 프랑스 행동강령을 작성했다. 행동강령은 당시 투쟁 요구들에서 우리나라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고 나날의 사건들에 깊이 몰두한 사람이 쓴 것이었다. 트로츠키는 10여 년 전 공산주의인 터내셔널에서 벌어진 토론들을 바탕으로 교훈을 이끌어냈다. 행동강령은 “이행기 요구” — 투쟁의 당면 요구에서 비롯하지만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들 — 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려 한 스탈린의 시도에 맞춰, 프랑스 공산당은 사회당을 공격하던 태도를 바꿔 주요 중단계급 정당인 급진당, 사회당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 1935년 6월에 세 정당이 선거 협정을 맺었다. 이른바 인민전선이다. 파시즘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트로츠키는 이제 급진당과 연합하게 되면 좌익 정당들이 파업할 수도, 파시스트와 대결할 수도, 그들의 “명망 있는” 새 동맹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행동도 일절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에는 단결을 거부하는 종파적 정책 때문에 파시즘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대중 동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인민전선도 대중 동원에 “브레이크”를 거는 비슷한 구실을 했다. 트로츠키는 직접 선출되고 “실제 투쟁”에 바탕을 두는 지역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인민전선은 1936년 5월 선거 승리로 정권을 잡았다. 기층 노동조합원들은 점거와 파업 물결로 호응했다. 트로츠키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민전선 지도자들은 파업을 비난했다. 주요 좌파 정당들은 모두 노동계급보다는 정부에 충성했다.

투쟁이 고양되자 지배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파업 물결을 끝내기 위해서 온갖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파업이 잦아들자 한층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급진당은 인민전선에서 탈퇴해 우익들과 동맹을 맺고 정부를 구성했다. 전에는 온건한 대응을 주장했던 공산당도 이제 지배자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좌파들은 하루 총파업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미 노동계급의 사기가 꺾인 상태여서 그 파업은 성공하지 못했다. 역사에 필연적인 것은 없다. 1934~36년에 혁명은 프랑스에서 의제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혁명을 실현시킬 전략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대중적인 정치 세력이 없었다. 인류는 그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터였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정중수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 (주)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시린 에바디 방한 기자 회견

“이란 정부의 폭력 진압을 반대하지만 서방의 제재도 반대해”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의 인권 변호사인 시린 에바디가 아시아기자협회의 초청으로 지난 8일 방한했다. 시린 에바디는 8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정부의 운동 탄압 상황을 전했다. 그녀는 여성과 아동, 반체제 인사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다 정부로부터 살해 위협과 구속을 당하기도 했다.

김용옥(ohotonge@left21.com)가 기자회견에 참여해 그녀의 주장을 취재했다.

이란은 지금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란의 현 상황을 바꾸기를 바랐다.

사람들은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불만의 원인은 아주 많다. 하나는 경제적 문제다. 이란은 부유한 자원국 중 하나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통 시민들의 삶은 힘들다. 정부 통계를 봐도, 국민 7명 중 1명, 즉 1천만 명이 빈곤층이다. 1천만 명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다. 실직자가 굉장히 많다.

이란에서는 검열이 심하고, 성차별도, 종교의 차별도 극심하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이란 국민들은 현 정부를 바꾸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시위했다. 그러나 정권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응했고 많은 이가 체포됐다. 이란 정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1백 명을 죽였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가 서구의 자금을 제공받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했다. 지금 이란 법정에서는 시위 참가자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웃긴 재판이다. 이 재판은 실제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정부는 거리에 몇 명만 모여도 그들을 체포하거나 총을 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이란에서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다



시린 에바디는 현 이란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서방 정부의 개입도 이란 민중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한다.

사진 임수현

“
이란 정부는 시위대가
서구의 자금을 제공받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했다.”

만, 탄압 때문에 시위의 형태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밤 10시에 창문을 열고 ‘알라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친다. 이것은 무슬림의 전통적 시위 방법 중 하나다. 밤 10시 이란 풍경을 보면 모든 골목에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다른 시위 방법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가 죽은 이들의 어머니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모임의 이름은 ‘자녀를 추모하는 어머니 모임’이다. 이 어머니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공원에 모인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자식들의 사진을 가져온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을 하면 체포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어머니들을 지지하는 다른 여성들도 검은 옷을 입은 채 같이 침묵 시위를 벌인다.

나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처한 방식을 비판하지만, 미국과 서방 정부가 이란에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제재는 이란의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침략에도 반대한다. 나는 세계가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해 주기를 바란다. 경제 제재보다도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확산되는 저항

최근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저항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스탠리 맥크리스탈 중장은 아프가니스탄 점령 전략을 평가한 후, 저항이 전통적 저항 중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맥크리스탈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저들의 승승장구는 기세를 꺾어야 하지만, 힘든 일이다” 하고 말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근처에 위치한 풀-이-아람의 정부 청사를 습격했다.

맥크리스탈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성공하려면 아프가니스탄군의 “대규모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외국군 10만

명이 주둔중이다. 그러나 점령군은 이를 40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보다 거의 4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군 6만 2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은 4만 5천 명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미군 4천여 명이 칸다하르 주(州)에서 공세 작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 헬만드 주에서 비슷한 작전을 벌였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다른 미군 병사들은 아프가니스탄 오지에 위치한 군기지들에 배치될 것인데, 그들은 게릴라식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침략 이후 군인 1천3백 명과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죽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월별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

올 7월에는 외국군 76명이 죽고 수백 명이 크게 다쳤다. 그중 22명은 영국군 병사였다.

맥크리스탈은 8월에 7월만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 말한다.

미군이 새로운 공세 작전을 발표했을 때, 영국 신임 육군총장 데이비드 리처드는 〈텔레그래프〉에게 영국군이 앞으로 “30~4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는 이렇게 말했다. “언제가 끝이 될지 말하기 힘들다. 과거 나라 간 전쟁과 달리 전쟁의 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나토가 철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우리는 실수를 이미 한 번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다시 한번

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저들의 계산이 틀렸음을 보여 줘야 한다.” 영국 보수당은 자신이 집권하면 더 많은 군대를 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은 탈레반 반란군에 맞선 전쟁의 일환으로 ‘마약상’ 3백 67명을 “생포하거나 사살하겠다” 하고 선언했다.

이런 살생부는 외국군의 이른바 ‘기습 작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국군은 저항세력 동조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라크에서 비슷한 작전으로 이라크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이먼 아사프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번역 김용옥 기자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출간!



2호(2009년 여름호, 15,000원) 목차

자발성, 전략, 정치 _ 크리스 하먼
네그리와 하트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지키기
세계의 노동계급 _ 크리스 하먼
세계화,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국의 성장통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2009년 노동조합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인터넷 민주주의 — 신화와 현실
조직자 〈소셜리스트 워커〉
민주집중제에 관한 메모

1호(2009년 봄호, 12,000원) 목차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세계화와 신경제라는 신화
‘다중 지성’은 유효한 개념인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에 부쳐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노조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소영 교수의 알튀세르주의
촛불운동과 다함께
용산참사 항의운동 참가 경험을 돌아보며
파병반대국민행동 논쟁사

구독 신청 문의

Tel 02 2271 2395 / Fax 02 2271 2396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서울대앞)
인서점 (건국대앞)
풀무질 (성균관대앞)
이음책방 (대학로)
녹두 (동국대후문)

매주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시~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 소공원
건대입구역 5번 출구